

統獨以後分野別實態

1991. 10

目 次

〈政治・行政分野〉

- ◇ 東・西獨 行政體系 統合 ('90.10) 5
- ◇ 統獨以後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91.6) 8
- ◇ 베를린으로 議會 및 行政府 移轉決定 ('91.6) 18
- ◇ 東獨 舊體制 清算關係 加害者들 拘束 ('91.6) 25
-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 ('91.7) 29
- ◇ 舊東獨 共產政權下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補償問題
('91.8) 35
- ◇ 統獨以後 懸案問題 및 解決實態 ('91.9) 40
- ◇ 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 ('91.10) 68

〈經濟分野〉

- ◇ 兩獨間 財產權 處理에 관한 合意 ('90.10) 75

- ◇ 獨逸 貨幣・經濟・社會統合 發効 1 周年에 즈음한
 評價 ('91.7) 79
- ◇ 統獨以後 財政上 問題點 ('91.7) 86
- ◇ 蘇聯占領下 舊東獨地域 沒收財產 不返還에 관한
 憲法裁判所 判決 ('91.8) 92
- ◇ 舊東獨 財產權 處理問題 ('91.9) 94
- ◇ 東獨經濟의 全面 私有化 反討論 ('91.9) 103

〈軍事分野〉

- ◇ 東・西獨間 軍隊統合에 따른 諸問題 ('91.9) 111

〈司法・法律分野〉

- ◇ Staasi 文書 閱覽 法律制定 ('91.4) 117
- ◇ 舊東獨 스파이 處罰과 關聯한 諸問題 ('91.8) 121
- ◇ 舊東獨地域 司法體系 確立과 法官 再任命 問題
 ('91.9) 128

〈 言論・教育分野 〉

- ◇ 舊東獨 靑少年에 대한 社會主義 意識化 ('91.8) 139
- ◇ 東・西獨間 放送協力에 관한 合意書 ('91.9)143
- ◇ 東・西獨의 言論・放送政策 ('91.9)148

東·西獨 行政體系 統合

('90.10)

- 과거 서독지역에는 4 백 5십만의 공무원 (인구 6천만) 이 동독 지역에는 2 백만의 공무원 (인구 1천 6백만) 이 근무하였음.
 - 인구 비례당 공무원 종사자의 비율이 동독지역의 경우 높기 때문에 (그 원인은 행정조직의 비능률과 억압체제 유지 필요에 따른 관료비대화 현상에 기인함) 통독으로 인한 대령 해고는 불가피함.
 - 통합조약 협상이 쟁점이 되었던 동독지역 공공기관 근무 종사자들의 재임용시 기준은
 - 특별해고 사유 대상자 : 과거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행위 집행에 종사자 Stas (국가 보안부) 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자
 - 적법해고 사유 대상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 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자,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치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할 자, 지금까지 존재하던 업무부서가 대체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은 채 해체될 기관에 종사하는 자
- 독일에는 한국에서의 총무처와 같은 중앙인사·조직·행정관리 기관이 없음.
 - 각 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인사·기구담당국에서 해당 동독 행정부의 인수와 통합문제를 개별처리하였음.

- 연방중앙부처 동독 공무원들의 재임용과 해고문제도 따라서 각 부처별로 “특별심사위원회” (Gutachteranssou)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중앙연방정부기관이 아닌 주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산하 공무원들은 주의회선거 (10.14) 를 통해 지방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서독 내무성에 설치된 “조직정비위원회” (Clearingstelle) 의 심의를 거쳐 행정조직이 재편되고, 아울러 동위원회에서 파견된 연방정부 파견관들이 10.3 통독이후 행정공백 상태를 임시로 관장하였음.
- 각 부처별로 통독으로 인해 조직을 확대하고 재편하는 문제는 공공업무 전반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된 다음 늘어난 행정수요와 책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처리될 것임.
- 따라서 각 부처가 동독공무원들을 몇명을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일단 10.3 통독과 더불어 국장급이상 고위직 (이들 대부분은 과거 공산당원임) 은 대부분 해고되었으며 실무자급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적어도 3년간의 시보기간 (각 부처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을 거쳐야 함.
 - 일단 시보기간을 설정하여 근무 대기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대량해고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 (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지도 모름) 을 피하고, 아직 통독으로 어느 정도의 행정수요가 발생할 지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정확히 판단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하고 있음.

- 동독 공무원들의 통일독일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 여부는 각 부처에 설치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향후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정비후 예산의 범위안 (이것도 무시못할 통독비용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전입되는 공무원들의 급료지불 문제

- 동독행정기관으로 부터 연방정부기관 및 주정부기관에 재임용 전입되는 자들은 “계약체결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서독의 공무원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들 - 급료, 근무시간, 휴가 -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10. 3 이후 해고되는 공무원들은 대기급료 (Wartegeld) 청구권을 갖는바, 과거 6개월간 지불되었던 평균급여의 70% 정도가 한시적으로 지급됨.
- 평균잡아 약 1,000DM에 해당하는 대기급료는 나이별로 차등을 두어 50세이하 공무원들에게는 6개월간, 50세이상 공무원들에게는 9개월간 지급될 것으로 통합조약 협상시 결정하였음.
- 아울러 이 기간동안 다른직장을 찾도록 직업전환교육 조치가 행해짐.

統獨以後 提起된 問題點 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91.6)

- 통독이후 동독지역 (신설 5 개주와 베를린지역) 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서독 지역간 실질적 격차해소 문제는 더 이상 내독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문제로서 각 기존부처에서 헌법이 명시한 소관 관할업무의 범위내에서 처리하고 있음.
- 통독직전 동독지역의 재건과 同化문제를 총괄하는 “ 재건성” 과 같은 특별부처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각부처 업무와 중복문제가 있고 발생문제들이 과도기적 사안들임을 감안하여 해당 각 부처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 현재 각 부처가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상실 (BK)
 - 동독지역 신설주문제 관련 내각소위원회 운영
 - 각 주정부 주지사실과 수상실간의 업무 협조·조정
 - 외무성 (AA)
 - 소련군 철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실무협상
 - 동독이 제3국과 맺은 외교, 영사관계, 협약처리
 - 내무성 (BMI)
 - 신설 동독지역주들의 행정체계 설립 지원
 -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 양독 지역 문화·체육분야 통합관련문제 지원

- 법무성 (BMJ)
 - 신설 동독지역 주들의 사법체계 설립지원
 - 구동독 공산당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보상
 - 반법치국가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 동·서독 법률체계 동화
- 재무성 (BMF)
 - 구동독지역 몰수재산권의 반환·보상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재편 (신탁청활동)
 - 신설 5개주 재정지원과 통독비용 조달
- 경제성 (BMW I)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경기부양책 실시
 - 신설 5개주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및 기업신설 장려
- 농림수산성 (BML)
 -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 개편, 자영농 육성
 - 농업 생산수단의 사유화
- 노동·사회성 (BMA)
 - 구동독지역 실업대책
 - 각종 사회보장제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보건성 (BMG)
 - 구동독지역 의료체계 전환
 - 의료보험체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교통성 (BMV)
 - 구동독지역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환경성 (BMU)
 - 동·서독간 환경보호체계 통합
 - 구동독지역 특수오염지대에 대한 특별대책

- 국방성 (BMVT)
 - 구동독 인민군의 독일연방군 통합
 - 부녀·청소년성 (BMFJ)
 - 구동독 청소년들의 동화문제
 - 동·서독간 낙태제도 통합문제
 - 가족·노인문제 담당성 (BMFS)
 - 구동독지역 연금생활자 복지체계 확립
 - 체신성 (BMPT)
 - 구동독지역 우편·통신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건설성 (BMBAU)
 - 구동독지역 주거현대화 및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
 - 교육성 (BMBW)
 - 신설 5개주의 교육개혁
 - 공산체제 관련학과·연구기관 철폐 및 종사자 해고
 - 과학기술성 (BYFT)
 - 구동독지역 핵발전소 기술안전 및 방사선 보호
 - 경제협력성 (BMZ)
 - 과거 동독의 제3세계 지원사업 인수문제
 - 공보처 (BPA)
 - 통독후 방송·언론 재편
- 또한, 각부처는 베를린에 지소 (Au enstelle) 를 설치하고 각 부처 장관 책임하에 구동독 중앙부처의 청산 (Abwicklung) 작업을 진행시킵.
- 구동독 중앙행정·해당기관의 인력 인수여부 결정, 건물 접수·이전 등

- 통독과정과 통일이후에 통합관련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상실, 내무성, 법무성의 세부기구개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수상실 : 통독관련 기구 축소>

- 통독이전

- Abt. 2 (외교·안보·통일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stab Deutschlandpolitik (통일정책담당관실) 이 있었음.
- 국장급 (Min, Dirig) 이 담당관이며, 3 개과로 구성됨.
 - Ref. 221 : 상주대표부 관할, 내독관계중 환경, 연구·언론분야, 베를린문제 담당
 - Ref. 222 : 내독관계중 사법·교통·가족상봉분야 담당
 - Ref. 223 : 내독관계중 경제·문화분야 담당

- 통독이후

- Abt. 1 (국내·법률문제 담당실) 로 이관되고, 그 밑에 신설 5개주문제 담당관실 (Gruppe 4) 설치
- 국장급 담당관 밑에 2개과로 구성됨.
 - 국장 (Min, Dirig) : Herr Stern
 - Ref. 141 : 통합조약 및 신설 5개주 문제 담당 (담당자 : Germelmann과장)
 - Ref. 142 : 베를린에 소재하며 본과의 연락기능, 구동독 수상실의 기구청산작업 담당 (담당자 : Permantier과장)

- 동독지역 신설 5개주문제 관련 내각 소위원회
(Kabinettausschu Neue Bundeslander) 구성·운영
- 참여부처
 - 내무, 법무, 재무, 경제, 농수산, 노동, 가족, 청소년, 보건, 교통, 환경, 체신, 건설, 과기, 교육
- 수상실 장관 주재로 사안발생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각 주정부 주지사실 장관들과 공동회의 개최

<내무성 : 통독이후 내독관계성 인력흡수·기구확대>

○ 통독이전

- Abt. G (국내기본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gruppe innerdeutsche Beziehungen (내독관계담당관실) 을 두고, 동독과의 통합조약 (Einigungsvertrag) 협상을 주도함.
- Abt. SM (스포츠·언론관계담당실) 의 2 개과가 내독간의 문제를 다룸.
 - Ref. SM2 : 내독간 체육교류
 - Ref. SM1 : 내독간 언론분야교류

○ 통독이후

- 구동독지역의 재건문제와 관련,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거 내독관계성 인력을 흡수하여 Arbeitsstab Neue Lander (동독지역 신설 주 재건 자문단) 이라는 전담기구를 설치

- 이 자문단은 전내독관계성 차관이었던 Dr. Prinsnitz가 내무성 차관으로서 단장이 되고, 그 밑에 1 명의 차관보 (Dr. Schmid : 전내독관계성 베를린문제 담당차관보) 와 5 개 분과로 구성됨.
- 각 분과에는 과거 내독관계성 간류직원이 나뉘어 배속되며, 각 분과는 동독지역 1 개주 및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자문역할 수행 (괄호안은 담당국장)
 - 1 분과 : 작센안할트주 및 재정·투자문제 (Rosen)
 - 2 분과 : 튀링겐주 및 공보·홍보문제 (Bitz)
 - 3 분과 : 작센주 및 고용창출조치문제 (Poehle)
 - 4 분과 : 브란덴부르크주 및 인사행정문제 (Stuberrauch)
 - 5 분과 : 메클렌부르크포어퍼머른주 및 소유권 문제 (Plewa)
- 아울러 기존 조직중 Abt. G의 기능을 보강, 내무행정과 정치교육담당을 담당토록 Unt. Abt. G II (정치교육·동구문제연구담당국) 을 신설
 - Ref. G II 1 : 일반내무행정, 정치교육문제 기본정책담당 (담당자 : Witzlau 과장)
 - Ref. G II 4 : 정치교육, 동구연구담당 (담당자 : Leonhardt 과장)
 - Ref. G II 5 : 통독과 관련한 정치교육담당 (담당자 : Finn과장)
 - Ref. G II 6 : 통독과 관련한 연구담당 (담당자 : Stute 과장)

- Abt. K (문화담당실) 을 기존의 Abt. VT (실향민문제담당실) 로 부터 분리하고, 동서독 지역간 문화분야에 있어서 이질성 해소 문제를 전담하는 2 개과를 신설
 - Ref. KII 4 : 문화분야의 분단 후유증 해소 문제 (담당자 : Dr. Ackermann 과장)
 - Ref. KII 5 : 신설 5개주의 문화시설확충 문제담당 (담당자 : Stiemke 과장)
- Abt. VT (실향민문제담당실) 은 계속 존속하면서 동구지역 으로부터 이주하는 독일민족에 대한 문제를 담당함.

<법무성 : 구체제청산관련 기구확대>

○ 통독이전

- 통독 1년전부처 사법·법률체계 통합 준비를 위해 Abt. Öffentliches Recht (공법담당실) 산하에 Arbeitsgruppe Innerdeutsche Beziehungen (내독관계담당 taskforce) 을 설치함.
 - 이 기구는 과장급 (MR) 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9 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됨. (담당자 : Dr. Viehmann과장)

○ 통독이후

- 기존의 Abt. 2 (형법담당실), Abt. 3 (민법담당실), Abt. 4 (공법담당실) 에서 각각 동·서독간의 법률체계 통합의 문제를 담당하면서

- 구동독체제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보상문제를 다루는
Abt. 5 Rehabilitierung (복권·보상문제담당실) 을 신설함.
- 이 신설실은 8 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개과가 베를린
에 소재함.
 - Ref. 5.1 : 기본정책 및 구속자 지원·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Dr. Eberbach과장)
 - Ref. 5.2 : 직업상 받은 피해 복권·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Lehmann 과장)
 - Ref. 5.3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피해 복권·
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Sturmhofel과장)
 - Ref. 5.4 : 형사처벌에 의한 피해 복권·보상문제담당
(담당자 : Bruns 과장)
 - Ref. 5.5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I)
(담당자 : Fieberg 과장)
 - Ref. 5.6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II)
 - Ref. 5.7-8 : 베를린 지소

統獨以後의 問題解決을 위한 獨逸政府 機構改編 (要約)

- 統一獨逸 政府는 統獨以後에 發生하는 問題에 대해 해당 各部處內에 專擔機構를 新設하거나 既存 組織을 活用하여 處理하고 있음.
- 一 統獨直前 東獨地域의 再建과 同化問題를 總括하는 特別部處 新設 必要性이 論議되었으나, 各 部處 業務와의 重複問題와 發生問題들이 過渡期的 事案들임을 감안하여 設置하지 않았음.
- 이와함께 各 部處는 베를린에 支所를 設置하고 人力引受, 建物 接受·移轉 등 舊東獨 中央部處의 청산작업을 進行시키고 있음.
- 統獨過程과 統一以後에 統合關聯 主要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首相室, 內務省, 法務省의 細部機構改編 內譯은 다음과 같음.

<首相室 : 統獨關聯機構 縮小>

- 統獨以前 : 外交·安保·統一政策 擔當室 傘下 3 개과로 構成되는 統一政策擔當官室에서 處理
- 統獨以後 : 國內·法律問題擔當室 밑에 2 개과로 構成되는 新設 5 개주 問題 擔當官室 設置
- 內務省등 15개 部處가 參與하는 東獨地域 新設 5 개주 問題 관련 內閣小委員會 構成·運營

<內務省 : 統獨以後 內獨關係性 人力吸收・機構 擴大>

- 舊東獨地域의 再建問題와 關聯, 州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行政支援과 諮問을 위해 5 개분과로 構成되는 “東獨地域 新設州 再建諮問團” 設置
- 全內獨關係省 次官 Dr. Prinsnitz가 內務省 次官으로서 諮問團長에 任命됨.
- 아울러 內務行政 統合과 政治教育을 擔當하는 政治教育・東歐問題研究擔當局 (4 개과) 과 東西獨 地域間 文化分野에 있어서 異質性解消 問題를 擔當하는 文化擔當室 (2개과) 新設

<法務省 : 舊體制 靑酸關聯 機構 擴大>

- 統獨 1 年전부터 東・西獨間의 法律體系 統合을 위한 刑法・民法・公法 등 3 개 擔當室을 設置
- 統獨以後에는 기존 3개 擔當官室과 함께 舊東獨體制下的 被害者에 대한 復權・報償問題를 다루는 8 개과로 構成된 復權・報償問題擔當官室을 新設하여 統一以後 問題를 處理

('91.6)

1. 移轉決定

- '91. 6. 20 獨逸聯邦下院 (Bundestag)은 11時間에 걸쳐 106名의 議員들이 大討論을 벌인 끝에 338:320으로 議會 및 行政府 所在地를 베를린으로 移轉하기로 最終 決定함.
- 統合條約 第2條에서 規定한 바에 따라 全獨議會는 戰後 暫定的인 秩序의 象徴이라고 할 수 있는 본으로부터 이미 首都로 決定된 바 있는 베를린으로 行政府와 議會의 所在地를 옮기기로 함으로써 統一獨逸의 將來에 새로운 意味를 賦與함.
- 이로써 베를린은 名實相符한 獨逸의 首都이자 장차 유럽統合의 政治·經濟的 中心地로서 東·西유럽을 잇는 文化的 架橋 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期待됨.

2. 移轉을 둘러싼 論點

- 黨派的 利害를 超越하여 베를린과 본을 각각 主張한 議員들간의 論點은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됨.
- 現在 國家的 統一達成이후 兩 地域間 生活隔差 解消問題가 提起되고 있는 가운데, 베를린으로의 移轉決定은 差別意識을 느끼고 있는 東獨地域 住民들에 대한 經濟的·心理的 配慮가 될 것이 라는 것임.

- 實際 많은 東獨地域 住民들은 戰後 西歐編入에의 象徴이었던 본이 統一獨逸의 政治·行政의 중심지로 남고 베를린 移轉에 반대하는 決定이 이루어지는 것을 東獨住民들의 利害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決定으로 받아들일 정도였음.
- 移轉 費用의 問題로서 많은 베를린 移轉 反對論者들은 베를린 移轉 費用의 莫大함 (財務長官은 300억 - 900억 DM을 言及하고 있으며, '95까지의 豫算運用計劃에 전혀 反映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음)과 본·라인地域 經濟의 沈滯를 憂慮하였음.
- 그러나 베를린에의 移轉에 따른 投資는 과거 東獨地域에서 차지하는 베를린의 位置面에서 볼 때 周邊地域에 많은 産業聯關 效果를 創出할 것으로 期待되어, 결국 東獨地域 再建을 위한 統獨費用으로 看做될 수 있으므로 費用 問題는 별다른 論點이 되지 못했음.
- 라인地域의 經濟沈滯問題는 본이 새로운 機能을 갖는 도시로 탈바꿈함으로써 이제까지 經濟水準과 雇傭水準을 維持할 수 있도록 保障한다는 線에서 折衷되었음.

— 聯邦主義(Federalismus)와 中央集權主義(Zentralismus)의 論爭은 과거 不幸했던 歷史와 관련하여, 또한 巨大都市들의 수많은 問題點이 言及되면서 加熱되었으나 戰後 聯邦主義가 잘 기능하고 있는만큼 베를린으로의 移轉은 단지 憲法機關의 移轉이라는 象徵性만을 갖는 것으로 과거의 잘못에 執着해서는 안된다는 主張이 優勢함.

- 베를린이 이제까지 聯邦政府의 支援에 依存하여 自生力이 없고, 세계 다른 巨大都市들이 안고 있는 많은 問題點이 있으나 長期的인 計劃下에 整備와 開發을 한후 移轉을 서서히 推進할 경우 베를린이 새로운 面貌를 가질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음.

— 戰後 秩序의 清算이라는 側面에서 將來 統一獨逸이 유럽내지 世界舞臺에서 어떤 役割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 베를린으로의 移轉이 강력하게 主張됨.

- 對立의 時代에서 和解의 時代로 轉換된 世界史的 好機를 맞아 동유럽을 市場으로 統合시키는 遠大한 유럽통합의 構想이 實現되는 中心地로서 베를린의 役割이 強調됨.

- 反面 본은 分斷時代에서 臨時的 性格을 갖으며 西歐編入政策이 實現된 중심지로서 將來 統一獨逸의 外交活動 領域을 넓히기 위해서는 未洽하다는 主張이 優勢함.

3. 移轉案의 主要骨子

- 聯邦下院에서 決議된 베를린으로의 移轉案의 骨子は 다음과 같음
 - 聯邦下院(Bundestag)은 베를린에 所在함.
 - '91. 12. 31까지 聯邦政府는 下院 行政處 및 베를린 市政府와 協議, 베를린 移轉決定에 따르는 具體的 案을 마련하여 院內交涉團體會議 및 各 常任委員會가 早速히 開催될 수 있도록 與件을 마련함.
 - 4년안에 下院의 業務遂行能力(Arbeitsfähigkeit)이 갖추지도록 要請됨.
 - 베를린에서의 下院 全體會議는 특별한 경우에 限하여 運營委員會의 決定으로 開催됨.
 - 늦어도 10-12年안에 行政府와 議會 所在地로서 베를린의 機能이 완전히 갖추지도록 함.
 - 聯邦下院은 聯邦政府와 議會의 移轉에 따른 適切한 措置를 취해줄 것과, 政府機能중 主要部分(Kernbereich)을 베를린으로 移轉하여 베를린이 政治的인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함.

- 베를린과 본은 議會가 베를린으로 移轉된 以後에도 본이 行政中心地(Verwaltungszentrum)로 남을 수 있도록 公正한 業務分擔에 合意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行政業務性格(Verwaltender Charakter)을 갖는 行政部處는 본에 남아, 이곳의 失業問題가 발생하지 않도록 配慮함.
- 본과 政府는 首都移轉에 관한 協約(Hauptstadtvertrag)을 맺어 移轉에 따른 본의 財政的 損失補償과 본을 중심으로 한 地域의 機能變更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
- 聯邦大統領이 베를린으로 제일 먼저 옮겨감.
- 聯邦下院은 聯邦上院(Bundesrat)이 聯邦主義的傳統에 依據, 그 所在地를 계속 본에 殘留시킬 것을 勸告함.

4. 移轉決定에 대한 評價

- 決議案 內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를린으로의 移轉에 관한 基本的인 決定은 이루어졌지만, 본에 대한 相當한 配慮를 하고 있는 折衷案的인 性格이 강하며, 많은 細部 決定事項들은 後續措置를 통해 具體化될 수 있는 餘地를 남겨놓고 있음.
- 본에 殘留가 決定된 行政的 性格을 갖는 部處와 機構의 範圍는 具體的으로 論議가 안되고 있으나, 遞信省과 各 部處의 執行的인 業務만을 管掌하는 傘下機關이 擧名되고 있음.

- 各 部 處는 본에 殘留시킬 部署나 機構를 自體的으로 決定하게 되며, 內閣에서 最終 決定할 것인데 首相室과 같은 완전히 政治的 性格을 갖는 部處를 除外한 全 部處가 그 機能의 一部 또는 相當部分을 본에 殘留시킬 것으로 豫想됨 .
 - 國防省의 경우 移轉시킬 수 없는 軍事施設(지하 방카등)이 많아 移轉이 困難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NATO司令部등을 본에 誘致하는 方案도 舉論되고 있음 .
 - 또한 본을 學問의 中心地로 育成하자는 案도 있으나, 雇傭效果가 적어 疑問視되고 있고, CSCE의 常設 事務處를 誘致하자는 案도있으나 이미 本部는 프라하에 두기로 決定된 만큼 紛爭防止 센터나 기타 會議體 常設機構의 誘致可能性이 論議되고 있음 .
- 베를린으로의 移轉에 따르는 具體的인 計劃案 作成은 建設省이 主務部處로 指定되었으나, 財源調達問題와 관련하여 財務省의 立場이 가장 困難하게 되었음 .
- 統獨費用 支辨을 위해 税金引上을 決定한 지 얼마안돼, 移轉費用 마련을 위해 다시금 税金引上이야기가 舉論되고 있음 .

- 財源이 限定된 가운데 이미 計劃되어 있는 東獨의 再建에 쓰여져야 할 돈들이 단지 國家의 位相을 높인다는 名目으로 憲法機關들의 베를린 移轉에 쓰인다는 非難도 擡頭되고 있음.
- 결국 統一獨逸의 經濟力에 많은 希望을 걸고 있기는 하나, 統獨前 税金引上을 둘러싼 論議 過程에서도 보듯 經濟的 現實을 無視한 政治的인 決定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同意하고 있음.

東獨 舊體制 清算關聯 加害者들 拘束

('91.6)

- 호네커가 지난 3 월 소련으로 탈출한 이후 베를린주 검찰은 4 명의 구동독 당과 정부 고위급 인사를 베를린장벽에서 국경탈출자에 대한 “ 살인교사” (Anstiftung des Mordes) 로 체포함.
 - 구속된 4 명은 정치국원이자 전국가각료회의 의장 stoph ('70 동·서독간 정상회담시 동독측 대표) , 전국방장관 kessler , 군장성이자 전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er Verteidigungsrat) 담당비서 streletz, SED 지역담당비서 Albrecht임.
 - 이들 4 명은 '74.5.3 당시 Honecker가 의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위원회 (8 명으로 구성, 주요국가 안보사항을 다룸) 의 일원으로서 동회의에 참가하여, 베를린장벽을 사수하기 위해 국경탈출자에 대해서 사격명령 (Schießbefehl) 을 내리는 결정에 동의한 인물들임.
- 구체제하에서 반법치국가적으로 행해진 정치적 폭행사례에 대해서는 신실주들의 사법체계가 확립되고,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는대로 형사소추할 방침임을 연방정부는 누차 밝힌바 있음.
 - 기존 서베를린 검찰이 주축이 되어 동베를린 검찰을 흡수, 가장 빨리 사법체계를 확립한 베를린 검찰은 “ 정권적 범죄행위” (Regierungskriminalität) 를 전담하는 임시조직을

편성하여 과거 체제수호를 위해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나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치국원, 국가안보위원회, 국경수비 문제를 담당했던 국방성, Stasi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음.

— 우선 가장 먼저 '61.8.13에 설치된 “반파쇼 보루” 라고 불리우던 베를린 장벽과 국경탈출 기도자들에 대한 사살 행위에 대해서는 명령자들로부터 명령을 수행한 군사병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할 방침임.

◦ 통계에 의하면 총 201명이 국경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베를린 검찰은 이미 153 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으며, 이중 38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살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다고 함.

◦ 이러한 국경탈출자 사살명령은 동독인민회의에서 통과되어 '82.5.1 부터 발효된 국경법 (Grenzgesetz) 에 의해 법제화 되었는데, 동법 27조에 의하면 “범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 되게 되어 있음.

— 또한 이러한 국경탈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총격사용 허용은 동독형법 213 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실정법적 규정들은 '66 년에 만들어진 “시민들의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UN협약” ('76 년 동독측에 의해서도 비준되었음) 에 위배된다고 많은 법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

◦ 동협약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나라를 포함하여 어느 나라나 떠날 수 있는 자유” 가 있다는 것임.

- “정권적 범죄행위”를 전담·조사하고 있는 한 검사는 이러한 국경탈출자에 대한 총격명령을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천하려는 자들에게는 결국 “사형집행”이나 마찬가지로 였다고 비판하고 있음.
-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경사수명령하에 소위 “공화국 탈출자”에 대해서 “정조준 사격”을 가한 명령 집행자들에게 Honecker는 포상을 포함한 격려를 보냈다는 것이 문서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임.
- o 베를린 검찰은 법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살인 명령을 내린 자들에 대해, “간접살인죄” (Mittelbare Täter)와 “살인교사죄” 중 직접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특성상 하수인들은 명령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살인행위에 직접적 책임을 물어 “살인교사죄”를 적용함.
- 현재 통합조약에 의하면 과거 동독에서 일어난 형사처벌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의 동독형법을 적용 (물론 반법치국가적 조항은 배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것은 서독기본법 103 조에 의해 형사소추는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임.
- “간접살인죄”의 경우는 직접 그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으므로, 구동독 지도층의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 명령은 결코 어떤 범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들에 대해 “살인교사죄”를 적용하였다고 함.

- 한편 구 SED (동독공산당) 의 잔당들과 소련측은 즉각 이러한 서독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음.
 - 구 SED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구속조치가 과거 양독간의 “정상적이었던 관계” 를 감안할때 당시 동독지도부에 대해서 신뢰를 기초로 협상을 추진했던 서독정부의 입장과는 상호모순되는 “승자의 논리” 라고 비난하고 있음.
 - 또한 소련측도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독일내 좌파세력을 꺾으려는 기도” 로 간주하고 있음.
 - 한편 SED 출신 변호사들은 과거의 국경사수행위가 소련측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유럽내 사회주의 세력 또는 동구제국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였으므로 현 독일정부는 소련과의 과거청산을 먼저 제기해야 하며, “체제유지” 를 단순한 “살인행위” 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의 추이가 주목됨.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

(Der Spiegel지, '91. 7. 22, 29자)

o 통독이후 동. 서독 주민들간의 관계 (통독이전과 비교하여) (%)

	더 가까워졌다	더 멀어졌다	모르겠다
서독 주민	51	36	13
동독 주민	45	50	5

o 통독이후 동. 서독 주민들간의 이질성 상존 문제

- 정도 (%)

	매우 크다	매우 작다
서독 주민	65	34
동독 주민	70	30

- 이질성 존속기간 (예상) (%)

	1 - 4년	5 - 6년	7 - 10년	그 이상
서독 주민	18	33	24	25
동독 주민	21	39	25	15

o 통독이후 통일에 대한 개개인의 기대 충족도 (%)

	기대 이상	기대 이하	기대 수준
서독 주민	8	56	32
동독 주민	8	49	41

- "통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고, 몇년의 과도기간 동안 양독이 독자성을 유지하며 병존하는 (nebeneinander)기간을 가졌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견 ? (%)

	전적으로 옳다	상당히 옳다	고려해볼만했다	완전히 틀리다
서독주민	15	30	25	29
동독주민	19	28	22	30

- "얼마나 많은 동독주민들이 통독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동독주민의 대답 (%)

모 두	거의대부분	상 당 수	단지소수만	거의아무도
1	8	40	46	5

- 동독주민이 "2동국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

		그 령 다	틀 리 다	모 르 겠 다
서 독 주 민		39	45	15
동독	'90 가을	75	15	8
	'91. 7	84	9	7

- 통독이 주민들에게 기쁨과 걱정중 어느 것을 주었다고 보는가 ?

(%)

	기 켜	걱 정
서 독 주 민	48	48
동 독 주 민	51	47

- 통독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서독지역의 복지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는가 ? (%)

	그 령 다	안 그 령 다
서 독 주 민	58	40
동 독 주 민	15	84

o 통독이후 경제상태에 대한 소견

- 각 개인별 경제상태

(%)

	양호함	부분적 양호	불량함
서독주민	64	30	5
동독주민	31	53	16

- 전체경제상태

(%)

	양호함	부분적양호	불량함
서독주민이 서독경제에 대하여	76	19	4
동독주민이 동독경제에 대하여	3	19	78

o 7.1부터 단행된 세금인상이 가계에 주는 부담

(%)

	크다	상당히크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서독주민	17	45	26	7
동독주민	21	48	20	7

o 통독이전의 사회보장 수준 (Soziale Sicherheit)에 대한 소견

(%)

	서독이 우월	동독이 우월	차이가 없음
서독주민	65	21	12
동독주민	7	83	6

○ 동서독 주민들간의 상내방에 대한 견해

(%)

	서독주민		동독주민	
	옳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서독주민들은 동독주민들을 마치 식민지 정복자처럼 대한다.	31	66	63	36
서독주민들은 그들의 여유있는 경제생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데에 익숙해 있지 않다.	39	60	64	35
동독은 서독에게 단지 상품시장일 뿐이다	55	44	92	7
많은 서독주민들이 동독주민들에 비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월감을 갖고 있다.	56	42	82	18

○ 베를린으로 의회와 행정부 소재지 이전결정에 대해

(%)

	서독주민	동독주민	독일전체
옳았다	48	76	54
틀렸다	50	21	43

○ 각당의 지지율

(%)

	기민/기사당 (CDU/CSU)	사민당 (SPD)	자민당 (FDP)	녹색당 (Grüne)	민사당 (PDS)
서독지역	40	41	10	6	1
독일전체	38	41	10	7	2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서독주민		동독주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미래가 걱정스럽다.	23	25	31	44
가끔 좌절감을 느끼고 용기가 없다.	18	22	32	44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20	21	22	34

○ 현실생활속에서의 총체적인 만족도

(%)

	아주만족	만족	부분적 만족	불만족	전혀 불만족
서독주민	22	46	22	6	3
동독주민	7	27	46	13	6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서독주민	동독주민
1.	환경오염 제거문제	실업문제 해결
2.	실업문제 해결	동독경제 재건
3.	청소년 마약 근절	청소년 마약 근절
4.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5.	동독경제 재건	동독지역 청소년에게 동일 기회 부여
6.	연금보장	연금보장
7.	급진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동. 서독 동일한 생활조건 창출
8.	사회적 형평 확보	환경오염 제거 문제
9.	범죄예방	사회적 형평 확보
10.	구공산당 잔재 제거	급진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보호

	서 독 주 민	동 독 주 민
11.	동독지역 청소년에게 동일 기회 부여	평온한 생활보장
12.	국가재정 적자 축소	구공산당 잔지 제거
13.	물가억제	물가억제
14.	외국인 문제 해결	주택환경 개선
15.	평온한 생활보장	동등한 여성권리 보장
16.	동.서독 동일한 생활조건 창출	40년간 공산당 치하 불신제거
17.	40년간 공산당 치하 불신 제거	외국인 문제해결
18.	동등한 여성권리 보장	국가재정적자 축소

- * 가장 큰 관심의 편차를 보이는 항목은 동.서독 동일한 생활조건의 창출 (서독주민 41%, 동독주민 72%), 국가재정 적자축소(서독주민 51%, 동독주민 29%) 항목이었음.

o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 이주희망 정도

	동독에 머물음	가능한한 동독에 머물음	가능한한 서독으로 이주함	서독으로 이주함.
18세-29세	44	41	13	1
동독주민 전체	73	21	5	1

舊東獨 共產政權下的 被害者에 대한 復權・補償問題

('91.8)

1. 法的 根據

- 統合條約 17條에 의하면 過去 東獨 共產政權의 反法治國家的 行爲의 犧牲者에 대해서는 統獨 以後 立法權者가 적절한 法的인 規定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18萬으로 推定되는 過去 舊體制 被害者인 東獨住民들이 각각 法院에 復權 및 補償을 要求하는 申請書를 提出하였음.
 - 이들은 反法治國家的인 恣意的인 判決을 통해 刑事上 拘禁되었거나, 精神病院에 強制入院 措置된 사람들로서 政治的인 復權과 아울러 經濟的인 補償을 苦待하고 있음.

2. 補償額 策定問題

- 현재 聯邦法務省은 被害者 代表 및 關係法律專門家 등이 參席한 가운데 聽聞會를 거쳐 立法을 推進中인데, 그 法案內容에 대하여 많은 論難이 계속되고 있음.

가장 論難이 되고 있는 部門은 補償額 問題인데 拘禁者들의 拘禁日을 基準으로 補償額을 決定하기로 方針을 定했으나, 拘禁日當 補償額 決定問題와 關聯, 政府의 財政形便이 問題가 되고 있음.

- 현재 法務省案은 拘禁期間 1달을 基準으로 450DM을 策定하여 約 15億 DM의 豫算을 計上하고 있음.

- 그러나 被害者들은 現 刑事補償請求權에서 規定하고 있는 600DM水準에도 못미치는 額數에 憤慨하면서, 拘禁者들의 苦痛에 相應하도록 補償額이 決定되어야지 財政形便이 補償額을 決定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또한 이제까지 베를린障壁 以前에 東獨을 脫出하거나 移住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補償은 전혀 考慮하지 않았는데, 立法聽聞會 過程에서 被害者와 野黨의 意見을 받아들여 補償額을 拘禁한달 基準 450DM이 아닌 300DM을 策定해 놓고 있음.

- 東獨地域에 殘留했던 犧牲者들에 대한 補償이 西獨으로 移住하여 이미 새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더 時急한 것은 事實이지만 論難의 素地가 尚存함.

3. 被害者 補償範圍 決定問題

- 현재 推進中인 法案에는 被害者 補償의 範圍를 너무 좁게 단지 刑事上 處罰을 받은 者와 精神病院 등에 強制入院 措置된 사람, 不法的인 行政處分으로 國境近方に 살던 사람중 強制移住措置를 당하여 財産上 損害를 입은 사람에 限定하고 있음.
 - － 被害者들은 그러나 體制에 抵抗하다가 받은 많은 職業上 差別(降等, 解雇, 職業教育 妨害, 昇進機會 剝奪), 精神的 被害 등에 대해서도 補償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함.
 - － 이러한 被害는 法律的으로 明確하게 立證하기 困難한 점이 있으나, 被害者의 苦痛이라는 側面에서 보면 拘禁과 같은 정도의 被害라고 많은 被害者들은 主張하고 있음.
 - － 따라서 拘束者 支援法(Haeftlingshilfegesetz)을 補完하여 立法을 推進하고 있으나, 좀 더 補償被害의 範圍를 넓게 考慮하기 위해서는 나찌 變行에 대해 被害補償을 規定한 聯邦被害補償法(Bundesentschädigungsgesetz)에 準하는 法律이 制定되어야 할 것이라고 野黨인 SPD와 被害者 代表들은 主張하고 있음.

- ※ 聯邦被害補償法에 의하면 “ 政治的, 宗教的, 世界觀的, 人種的인 差別로 肉體와 健康, 自由, 財産 등의 被害를 입었거나 職業的, 經濟的 成長의 可能性을 剝奪당한 것” 에 대해서 補償이 이루어지도록 規定하고 있음.

4. 現在의 當面問題

가. 補償時期

- 이러한 立法措置를 통해 補償이 이루어진 다 하여도 너무 늦게 이루어질 경우, 實際 補償의 惠澤을 많이 못받을 것으로 被害者 代表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음.

- 실제 被害者 團體들이 調査한 바에 따르면 政治的인 拘禁者들의 70%정도가 나이가 이미 65歲以上으로 年老하며, 또 拘禁에 따른 後遺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함.
- 반면 舊東獨地域 新設州의 司法體系가 제대로 確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復權·補償 申請書類가 쌓여 있어 이를 審査 確定하는데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이라고 함.

- 예를 들어 Erfurt市 같은 경우는 3명의 判事가 3,000餘件의 書類를 審査해야 하는데, 그 處理는 빨라야 2年이 걸릴 것으로 豫想되기도 함.

나. 名譽回復에 관한 問題

- 많은 被害者 代表들은 또한 物質的 補償에 앞서 우선 自身이 罪가 없었고 단지 政治的 動機로 被害를 입었다는 名譽回復에 관한 宣言이 聯邦 下院과 같은 國民의 代表機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希望함.
- 東獨地域에 居住하던 被害者들이 西獨地域으로 와서 職場에 就職을 할 경우, 緣故地 警察署가 發行하는 身元證明書(Fuehrungszeugnis)를 提出해야 하는 바, 과거 拘禁 經歷이 抹消되지 않고 그냥 記載되어 있어 本意 아니게 差別과 不利益을 당하는 事例가 많다고 함.
- 또한 그 身元證明書에는 예를 들어 “ 刑法 214條에 의해 國家活動 危害行爲를 하여 處罰받았음” 이라고만 적혀 있어, 그것이 迫害였는지가 分明하게 明示되어 있지 않아 被害者들은 자신의 無罪를 證明하기 위해 또다시 많은 努力을 해야하는 矛盾이 發生하고 있음.

1. 概 觀

- 獨逸統一에 의해 東獨地域 經濟는 90年中 -20% 成長할 정도로 後退된 반면에 西獨地域 經濟는 統合以後 2.3% 實質成長하였으며, 向後 몇년동안 獨逸 經濟는 税金 및 特別賦課金 引上 등으로 인해 成長率이 둔화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점차 회복세에 있는 것으로 分析됨.
- 특히 많은 經濟學者들이 東獨의 市場經濟構造로의 急轉換에 따른 物價急騰을 憂慮했던 것과는 달리, 經濟統合以後 東獨地域의 消費者物價는 8.5% 上昇에 그쳤으며, 비록 東獨地域이 80%以上の 企業 倒産과 280萬名の 失業者·短縮勤勞者 發生, 私有化의 遲延 등으로 인해 短期的인 生産性 저하(90년 4/4분기 前年同期 對比 50%減少)에 직면해 있으나 92년이후 점차 回復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음.
- 그러나 東獨地域 經濟가 急速히 成長할 수 있도록 西獨地域 企業의 投資 및 外國投資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東獨地域의 社會間接資本 施設을 擴充해야 할 뿐만 아니라 新設 州政府·地方自治團體의 行政支援 體系를 確立하는 등 經濟成長 基盤을 構築해야 할 必要性이 제기되고 있음.

- 經濟的 問題의 원만한 解決趨勢와는 달리 東獨教育 體系의 改編 및 東獨住民 再教育問題, 社會的 異質性 殘存, 東獨體制 清算에 따른 진통, 東·西獨人間의 偏見, 下部構造의 統合에 따르는 問題點 등 實質的인 統合에는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으로 보임.
- 이같은 獨逸統一에 비추어 볼 때 南北統合의 경우에는 2,000억\$ 이상의 統一費用이 들 뿐만 아니라 事前에 各 部門別로 統合對備計劃을 마련하는 등 치밀한 對應策을 講究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2. 主要 懸案問題

가. 概 要

- 統獨以後 여러分野의 實態에 관한 輿論調查 結果 ('91.7.22, Spiegel지)에 따르면, 가장 먼저 解決해야 할 重要課題로서 失業등 經濟問題 解決, 東獨地域 住民 生活水準 向上 등이 舉論되고 있으며, 急進勢力 排擊, 舊共產黨 殘滓 除去 등 政治問題에도 關心을 나타낸 것이 特徵임.
- 특히 가장 큰 關心의 偏差를 보이는 項目이 東·西獨間의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西獨住民 41%, 東獨住民 72%), 國家財政赤字 縮小(西獨住民 51%, 東獨住民 29%)인 것은 價値觀의 差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음.

主要 縣案問題 處理 優先順位

優先 順位	西 獨 住 民	東 獨 住 民
1	環境汚染 除去問題	失業問題 解決
2	失業問題 解決	東獨經濟 再建
3	青少年 麻藥 根絶	青少年 麻藥 根絶
4	住居環境 改善	犯罪豫防
5	東獨經濟 再建	東獨地域 青少年에게 同一機會 賦與
6	年金 保障	年金 保障
7	急進勢力으로부터 民主主義 保護	東·西獨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
8	社會的 형평 確保	環境汚染 除去問題
9	犯罪豫防	社會的 형평 確保
10	舊共產黨 殘滓 除去	急進勢力으로부터 民主主義 保護
11	東獨地域 青少年에게 同一 機會 賦與	평은한 生活保障
12	國家財政 赤字 縮小	舊共產黨 殘滓 除去
13	物價抑制	物價抑制
14	外國人問題 解決	住宅環境 改善
15	평은한 生活保障	同等한 女性權利 保障
16	東·西獨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	40年間 共產黨 治下 不信 除去
17	40年間 共產黨 治下 不信 除去	外國人 問題解決
18	同等한 女性權利 保障	國家財政赤字 縮小

나. 部門別 實態

東獨地域 經濟基盤 崩壞로 인해 後遺症 深刻

- 東獨地域 企業中 80%以上이 倒産, 총 84만여명의 失業者 및 200여만명의 短縮勤勞者 發生(東獨地域 勤勞者의 1/3以上) 으로 社會的 緊張이 高潮됨.
 - 東獨企業體는 거의 全分野에 걸쳐 西方企業과 競爭할 수 있는 業種이 全無한데다 商品開發과 販路 등의 問題로 國內市場을 거의 상실함과 동시에 輸出市場도 대부분 상실
- 國營企業의 民營化 不振, 所有權 返還 蹉跌 등으로 인해 東獨地域에의 投資가 萎縮됨.
 - '90 下半期 企業體의 施設投資가 西獨地域 1,700 억DM인데 비해, 東獨地域 170억DM
- 劣惡한 社會間接資本, 東獨 企業體의 현저한 競爭力 弱화, 經營者·專門人力 不足 등으로 인해 東獨地域 産業 生産이 前年對備 50%以下로 減少함.
 - 東獨의 賃金水準이 西獨의 50%에 불과, 公共機關 從事者들이 個人會社로 移職
- 東獨地域 住民中 西獨地域에의 就業('90年중 50萬名) 完全移住('90年 36萬名) 등으로 인해 居住人口 減少, 勞動力 不足狀態인데다 西獨人의 東獨地域 勤務忌避 경향이 대두됨.

主要 縣案問題 處理 優先順位

優先 順位	西 獨 住 民	東 獨 住 民
1	環境汚染 除去問題	失業問題 解決
2	失業問題 解決	東獨經濟 再建
3	青少年 麻藥 根絶	青少年 麻藥 根絶
4	住居環境 改善	犯罪豫防
5	東獨經濟 再建	東獨地域 青少年에게 同一機會 賦與
6	年金 保障	年金 保障
7	急進勢力으로부터 民主主義 保護	東·西獨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
8	社會的 형평 確保	環境汚染 除去問題
9	犯罪豫防	社會的 형평 確保
10	舊共產黨 殘滓 除去	急進勢力으로부터 民主主義 保護
11	東獨地域 青少年에게 同一 機會 賦與	평온한 生活保障
12	國家財政 赤字 縮小	舊共產黨 殘滓 除去
13	物價抑制	物價抑制
14	外國人問題 解決	住宅環境 改善
15	평온한 生活保障	同等한 女性權利 保障
16	東·西獨 同一한 生活條件 創出	40年間 共產黨 治下 不信 除去
17	40年間 共產黨 治下 不信 除去	外國人 問題解決
18	同等한 女性權利 保障	國家財政赤字 縮小

나. 部門別 實態

東獨地域 經濟基盤 崩壞로 인해 後遺症 深刻

- 東獨地域 企業中 80%以上이 倒産, 총 84만여명의 失業者 및 200여만명의 短縮勤勞者 發生(東獨地域 勤勞者의 1/3以上) 으로 社會的 緊張이 高潮됨.
 - 東獨企業體는 거의 全分野에 걸쳐 西方企業과 競爭할 수 있는 業種이 全無한데다 商品開發과 販路 등의 問題로 國內市場을 거의 상실함과 동시에 輸出市場도 대부분 상실
- 國營企業의 民營化 不振, 所有權 返還 蹉跌 등으로 인해 東獨地域에의 投資가 萎縮됨.
 - '90 下半期 企業體의 施設投資가 西獨地域 1,700 억DM인데 비해, 東獨地域 170억DM
- 劣惡한 社會間接資本, 東獨 企業體의 현저한 競爭力 弱화, 經營者·專門人力 不足 등으로 인해 東獨地域 産業 生産이 前年對備 50%以下로 減少함.
 - 東獨의 賃金水準이 西獨의 50%에 불과, 公共機關 從事者들이 個人會社로 移職
- 東獨地域 住民中 西獨地域에의 就業('90年중 50萬名) 完全移住('90年 36萬名) 등으로 인해 居住人口 減少, 勞動力 不足狀態인데다 西獨人의 東獨地域 勤務忌避 경향이 대두됨.

- 全 農家의 50%인 80萬 農家가 破産狀態
- 失業者에 대한 失業手當 支給, 職業訓練 實施, 職業資質向上 강좌 등을 實施하고 있으나 成果 未洽.

統一費用 過多로 인한 聯邦政府 財政政策 打擊

- 統一費用 뿐만 아니라 蘇聯·東歐地域에서의 損失 補填 등으로 인해 聯邦政府의 財政赤字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子女가 돌인 中産階層 家計의 경우 年間 負擔額이 1,000DM에 달하고 있어 더이상의 税金引上도 困難한 實情에 있음.
- 특히 統一費用외에도 首都移轉費用, 유럽共同航空 開發計劃, 鐵道設備 保全 등 豫想치 못한 費用 등으로 '91年末 基準 聯邦財政赤字는 1조 3,000억 DM 인데다, 이에 대한 利子만도 政府豫算의 社會保障 支出額 850억 DM과 맞먹는 수준임.

— 統一關聯 部門의 財政赤字도 '91年 560억 DM

- 그럼에도 불구하고 公共會計赤字 擴大, 保險金 補填, 舊東獨地域 企業體의 債務額 補填으로 인해 聯邦財政赤字는 더욱 增加할 것으로 보임.

統一費用 主要 推定值

(단위: 억 DM)

區 分	所 要 額	備 考
○ 蘇聯軍撤收費用	130	
○ 舊東獨政府財政赤字 引受分	300	
○ 舊東獨 對外債務 引受分	300	
○ 信託廳 借入金	900	
○ 過去東獨國有企業의 債務引受分	1,000	
○ 東獨地域 住宅의 補修維持·現代化	500	
○ 農業構造再編을 위 한 支援金	70	
○ 交通網 改善	1,270(鐵道 480, 道路 700,海運 80, 空港 10)	
○ 環境淨化施設 投資	2,000	※ 産業構造
○ 郵便·通信分野 施設投資	550	再編을 위한
○ 教育投資	770	投資는 民間
○ 에너지産業現代化	1,000	企業에 委任, 政府는 公共 投資에 注力
總 計	8,790	

東獨地域의 行政支援體系 未備

- 統獨으로 인해 西獨地域 州政府는 歲入이 增大된 반면에 東獨地域은 經濟深滯, 行政體系 未備 등으로 歲入이 激減, 財政自立度脆弱
 - 東獨地域이 西獨地域의 生活水準에 이르기 위해서는 西獨經濟 成長率에 비해 매년 5배以上の 經濟成長이 必要하며, 매년 1,000억 - 1,500억 DM 所要推定
- 東獨地域에서의 行政·司法(특히 登記業務등)體系가 未備되어 非能率 招來, 業務 폭주
- 住宅需要 充足을 위해서는 東獨地域에만 年間 10만채(獨逸全體 50만채)를 新設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0만채의 住宅은 維持가 不可能하고, 不居住 住宅도 50만채 이상인데다 “막대한 損傷” 이상의 建築物이 51%에 달하는 등 東獨地域 住宅問題에 있어서 많은 缺陷이 發見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제대로 支援되지 않고 있는 實情임.
 - 특히 新設 5個州의 住民數는 계속 減少 趨勢(95년경 1,500만명 豫想)이면서도 높은 離婚率등으로 인해 새가정을 꾸리려는 需要는 계속늘고 있음.

信託廳의 私有化 推進實績 未洽과 所有權 紛爭繼續

- 舊東獨體制下的 國有였던 人民共有財産을 處分하고 있는 信託廳은 現在까지 全 製造業種중 1/8 (8,790개 企業중 1,596개 매각), 大型 百貨店 100%, 요식업 및 小商店 70%, 호텔과 藥局 50%를 私有化 하는데 成功하였으며, 65만명의 일자리 確保, 80억 DM의 投資를 약정하고 있음.
- 그러나 第3次 産業의 私有化 實績에 비해 製造業등 生産的 企業의 私有化 實績이 미미하며, 過去 債務 清算問題, 共產黨 出身幹部 殘存 등의 問題로 西方 企業의 投資가 저조하여 東獨의 經濟回復에는 별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아직도 수많은 信託廳 산하 企業體도 收入에 비해 支出이 많아 投資支援을 하려고 해도 “ 밀빠진 독 ” 과 같은 狀態이며, 특히 환경오염 이 심한 東獨地域 化工業의 處理는 信託廳의 負擔이 되고 있음.
 - 또한 過去 東獨政權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財産 權의 返還 및 處理가 遲延되고 있는데다, 法的 所有權關係가 不分明하여 引受自體를 꺼리고 있음 (현재 所有權 返還 申請만 하여도 130만건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行政人力과 經費가 所要 될 것으로 豫想)

兩獨人間的 文化的 異質性 및 西獨地域 住民에 대한
税金引上 등으로 인해 統獨에 대한 否定的 心理波及

- 西獨地域 個人 및 法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石油類稅, 保險稅, 自動車稅, 담배稅 引上措置(西獨地域 國民個人所得에 대한 담세율 '95년 45%豫想)로 인해 西獨地域 住民 不滿高潮
- 統獨以後 輿論調查 結果에 따르면, 生活의 質, 文化的 差異, 自我意識 등에서 相互 異質感이 尚存(65 - 70%)해 있을 뿐만 아니라, 統獨에 대한 期待感이 減少(50%以上)한데다 東獨地域 住民은 『2등 國民』이라는 劣等意識마저 갖고 있어(86%) 實質 統合에의 障礙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91.7.22자 Spiegel지)
- 특히 東獨住民은 “ 人民”, “ 社會主義”, “ 大衆”이라는 말을 常用化하여 集團的 意識과 더불어 意思疏通過程에서의 階層化 傾向이 두드러져 千篇一律적이고 機械的인 公式言語를 많이 쓰고 있음이 특징으로 지적됨.
- 勞動·商品·時間·돈 등 日常生活속의 現實 감각은 물론, 用語의 의미가 서로 달라 西獨住民의 優越感과 東獨住民의 心理的 不安感 加重
- 결국 40年間의 共產獨裁體制는 不自由와 人間性 輕視 등을 통해 東獨地域 住民들의 精神狀態를 荒幣化시켰음.

其 他

- 汚染된 河川 · 空氣 등의 淨화가 時急
 - 計劃經濟下에서는 環境汚染과 經濟分野 惡化間의 惡循環 되풀이
- 東獨地域의 保健醫療水準은 西獨地域 住民들에 비해 劣惡할 뿐만 아니라 醫療陣의 再教育, 病院施設 現代化, 綜合病院 財政自立 등이 時急
 - 東獨地域 年金額은 西獨年金額의 1/2
- 東獨舊體制 人士들에 대한 處罰 및 補償問題
 - 處罰에 대한 法の 형평문제 대두
 - 減縮對象者 및 殘留者들도 將來에 대한 不安感과 西獨出身者들과의 精神的 · 經濟的 갈등 尚存
- 外國軍 撤收 · 獨逸軍 規模縮小(30여개 聯邦軍部隊 廢止)에 따른 270여개 基地 閉鎖와 東獨人民軍의 聯邦軍 編入 · 減縮등으로 인한 失業問題, 經濟基盤 상실 可能性
- 各種 體育團體 · 社會團體 등의 統合에 따른 副作用

3. 獨逸政府의 解決努力

가. 聯邦政府의 機構改編

- 獨逸聯邦政府의 各部處는 統獨以後 發生하는 諸問題가 過渡期的 事案임을 勘案, 해당 各部處 內에 專擔機構를 新設하거나 既存組織을 活用하여 處理해 나가고 있음
- 특히 各部處는 베를린에 支所를 設置, 舊東獨 中央部處의 清算作業을 進行시키고 있음.
 - 人力引受與否 決定, 建物 接收·移轉 등

各部處別 主要任務 및 組織改編 內容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1. 首相室 (B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獨地域 新設 州問題 關聯 內閣小委員會 運營 (內務, 法務 등 15개 部處) ○ 各 州政府 知事室과 聯邦首 相室間의 業務協助 ·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設 5個州問 題 擔當官室 (제 4과장) 新設
2. 外務省 (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軍 撤收問題와 관련된 諸般 實務協商 ○ 東獨이 제 3국과 맺은 外交 · 領事關係, 協約 處理 	
3. 內務省 (BM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獨地域 新設 州들의 行政 體系設立 支援 ○ 東獨地域 住民에 대한 政治 教育 ○ 兩獨地域 文化 · 體育分野 統合問題 支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獨以後 內獨 關係省 人力 吸收, 『東獨地域 新設 州 再建 諮問團』 設置 — 5개 分科委 設置 ○ 內務行政과 政治教育擔當을

部處別	擔當業務	組織改編內容
4. 法務省 (BMJ)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獨地域 新設 州들의 司法體系 設立支援 ○ 舊東獨 共產黨에 의한 被害者의 復權·補償 ○ 反法治國家的 加害者들에 대한 處罰 ○ 東·西獨 法律體系 同化 	<p>위한 『政治教育東歐問題研究擔當局』을 新設 (4개과)</p> <p>○ 文化擔當室을 失鄉問題擔當室로부터 分離하는 한편, 2개全擔部署 新設</p> <p>○ 東獨體制下에 서의 被害者에 대한 復權·補償問題를 다루는 『復權·補償問題擔當室』을 新設 (8개과로 구성)</p>
5. 財務省 (BM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東獨地域 沒收財產權의 返還·補償 ○ 舊東獨 國有企業 私有化와 再編指導 (信託廳活動 監督) ○ 新設 5個州 財政支援과 統獨費用 調達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6. 經濟省 (BMW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東獨地域 經濟再建 및 경 기부양책 실시 ○ 新設 5個州에 대한 外國投資 誘致 및 企業新設 장려 	
7. 農林 水產省 (B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業生產協同組合의 構造 改編, 自營農 育成 ○ 農業 生産手段의 私有化 措置 	
8. 勞動· 社會省 (B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東獨地域 失業對策 ○ 各種 社會保障制度의 東獨地 域 擴大 實施 	
9. 保健省 (B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東獨地域 醫療體系 轉換 ○ 醫療保險體系의 東獨地域 擴大 實施 	
10. 交通省 (BM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東獨地域 交通分野 社會 間接資本施設 擴充 	
11. 環境省 (BM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西獨間 環境體系 統合 ○ 舊東獨地域 特殊汚染地帶에 대한 特別對策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織改編內容
12. 國防省 (BMVT)	○ 舊東獨 人民軍의 獨逸聯邦 軍 統合	
13. 婦女· 青少年省 (BMFJ)	○ 舊東獨 青少年들의 醇化 ○ 東·西獨間 落胎制度 統合	
14. 家族· 老人問題 擔當省 (BMFS)	○ 東獨地域 年金生活者 福祉體 系 確立	
15. 遞信省 (BMPT)	○ 東獨地域 郵便·通信分野 社會間接資本 施設 擴充	
16. 建設省 (BMBAU)	○ 東獨地域 住居 現代化 및 住宅景氣 活性化 推進	
17. 教育省 (BMBW)	○ 新設 5個州의 教育 改革 ○ 共產體制 관련 學科·研究 機關 撤廢 및 從事者 解雇	

部處別	擔 當 業 務	組 織 改 編 內 容
18. 科學 技術省 (BYFT)	○ 東獨地域 核發電所 技術安全 및 放射線 保護	
19. 經濟 協力省 (BMZ)	○ 舊東獨의 第3世界 支援事業 引受	
20. 公報處 (BPA)	○ 統合後 放送 · 言論再編	國內局 副局長, 對內 · 外政策課, 言論 · 弘報擔當 西베를린事務所 新設

나. 議會 및 行政府 所在地를 베를린으로 移轉決定

- 獨逸統合條約 第2條에서 規定한 바에 따라 全獨
議會는 이미 首都로 決定되어 있는 베를린으로
議會 및 行政府의 所在地를 移轉키로 決定(6.20)
함으로써, 差別意識을 느끼고 있는 東獨地域 住民
들에 대한 經濟的 · 心理的 배려와 아울러 베를린이
名實相符한 統一獨逸의 中心地로서 東西유럽을 잇는
架橋役割을 하게 될 것으로 期待됨.

1次的으로 聯邦大統領, 聯邦下院이 베를린에 移轉하며, 行政府 機能中 主要部分을 베를린으로 移轉하여 베를린이 政治的 機能을 修行 托록 함.

- 특히 베를린이 東獨地域內에 위치하고 있어 베를린에 대한 投資는 베를린自體의 自生力을 높일 뿐 아니라 周邊地域에 많은 關聯産業 效果를 創出, 東獨經濟回復의 先導的 役割을 할 것으로 豫想됨.

다. 司法·法律體系 確立

- 第2次 統合條約에 따라 기본적으로 東獨地域에서도 西獨法이 擴大 適用되지만, 일방적인 法律移入으로 혼란이 豫想되는 分野에는 過渡期間 동안 東獨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規定되어 있음.
- 또한 西獨의 경우에는 地方法院, 州法院, 高等州法院, 聯邦最高法院의 4審으로 되어 있고, 東獨의 경우에는 市·郡法院, 地區法院, 最高法院의 3審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財政法院, 勞動法院, 社會法院, 行政法院이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法治國家的 司法體系를 確立토록 하였음.
- 東獨의 法院判決과 行政決定은 法治國家的 原則과 綜合條約에 어긋나지 않는 한 統合後에도 계속 有效

○ 특히 過去東獨地域 判·檢事들이 共產主義 體制 守護의 核心人物이었던 점을 勘案, 『法官選出 委員會』, 『檢事任用委員會』에서 再審査·任用 하고 있으며, 기존 東獨의 判檢事들을 再教育시키는가하면 (關聯費用의 50% 聯邦政府 負擔) 隱退한 西獨地域 判·檢事·法律執行人的 東獨地域 派遣을 推進하고 있음.

— 法官의 경우, 法官選出委員會(判事 4명, 聯邦 議員 1명, 州議會 및 地方議會議員 5명으로 '90. 7.22자로 구성)의 審査를 거쳐 3-5년간 의 試補期間이 경과한 후 終身法官으로의 任用與否를 決定(베를린州는 東베를린地域 法官중 4명을 除外하고는 전부 解雇시키고, 西베를린 法官들이 管轄權을 장악하였음.)

— 行政法院등 特殊法院의 경우에는 130명의 西獨 法官을 東獨地域에 派遣(關聯費用 50% 聯邦政府 負擔), 西獨判事 2人, 東獨判事 1人으로 合議部를 構成토록 하였음.

○ 그러나 '91. 4. 15까지 舊東獨出身 法官·檢事選拔 을 완료하고 새로운 法曹人을 追加 採用할 計劃 이었으나 아직까지 法官·檢事選出委員會의 활동 이 지지부진한데다,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刑事 裁判의 경우 訴訟依賴件數가 800%증가, 4만 5천件 未處理中) 西獨 法曹人들이 自發적으로 東獨으로 건너가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혼란이 豫想됨.

法曹人力 不足現況

(단위 : 명)

區 分	總所要人員	選拔可能舊東獨人力	追加所要人員
法 官 檢 事 法 律 執 行 人	5,000	600 - 700(1,200)	4,000 이상
	1,200	400 - 450 (900)	700 이상
	3,000	0	3,000
計	9,200	1,000-1,150(2,100)	7,700 이상

()은 舊東獨地域 전체인원수

- 또한 舊東獨地域 收監者들에 대한 刑量審査委員會를 개최하는 한편(2회의 赦免措置로 대부분 석방), 政治的 加害者, 間諜活動을 한 者, Staasi에서 反法治國家的 行爲를 한 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州法務省이 司法體系를 確立하고, 각종 證據資料가 確保되는대로 聯邦法에 의해 계속 處罰해 나갈 方針임.
- 各種 被害者에 대한 復權 및 補償은 關係法令을 制定해 推進하고 있으나, 補償財源의 確保와 關係人의 申請·確認 節次로 相當期間이 所要될 展望임.

라. 行政體制 統合과 公務員 再教育

○ 獨逸聯邦政府는 綜合過渡期間의 『政府 全權委任者』가 行政業務를 選舉에 의한 公式的인 新設 州政府에게 移管한 以後에도 聯邦內務省內에 設置된 『組織整備委員會』를 통해 東獨地域에 대한 行政 支援을 하고 있음.

— 西獨 聯邦政府 및 州政府는 東獨地域 州政府· 州知事들의 要請에 따라 專門委員을 東獨地域에 派遣, 1996.6.30까지 特定諮問業務를 수행함.

— 統獨으로 인한 各部處別 組織改編·縮小· 統合問題는 실제 行政需要와 豫算運用 可能 範圍內에서 個別處理함.

— 특히 內務省은 『新設 5個州 實務팀』 (Arbeitsstab Naue Laender)을 통해 東獨再建 問題를 諮問(聯邦主義的 行政特性上 指示形式이 아닌 諮問形式)하는 한편, 各 州政府 內務省에 設置되어 있는 『再建團』(Aufbaustaebe) 과도 協力하여 業務를 處理하고 있음.

※ 再建團의 構成 : 地方自治團體長, 地域經濟 團體의 代表, 地方勞動事務所長, 地方信託廳 代表 및 필요에 따라 州政府 代表나 聯邦雇傭 廳의 代表가 追加됨.

○ 西獨에는 人口 6,000만에 450만의 公務員이, 東獨地域에는 人口 1,600만에 200만의 公務員이 公共業務分野에서 從事하였는데, 이는 東獨이 中央統制體制를 유지하기 위해 行政網이 肥大한 것으로서 統合에 따른 東獨地域 公務員의 解雇 및 再審査 등이 不可避한 實情이었음.

— 解體·縮小措置에 該當되어 失職狀態에 들어가는 公務員들은 年齡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간 平均 급여의 70%의 待機給料請求權 保有 (이 期間中 새직장 마련을 위한 職業轉換教育을 받음)

— 實務者級 公務員들은 계속 勤務를 원하는 경우 최소한 3年間の 試補期間 (各 部處마다 期間이 다를 수 있음)을 거쳐야 함.

○ 그러나 舊東獨 公共機關 從事者로서 解雇되지 않고 再任用되는 자는 等級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反法治國家的 前歷與否, 職位에 상응하는 資格保有 與否 등을 審査받아야 하며, 獨逸憲法上에 명기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새로운 體制가 요구하는 職務能力을 培養하기 위해 集中的인 再教育이 實施됨.

猶豫期間 內容

區 分	資 格	猶 豫 期 間	備 考
高位職	대학교 졸업자격이상	4 년	
高級職	전문대학교 졸업자격이상	3 년	
中級職	고등학교 졸업자격이상	2 년	
單純職	중학교 졸업자격이상	1 년	

公務員 再教育內容

對 象	實 施 機 關	教 育 重 點	教 育 期 間
高位職	聯邦中央 公務員 教育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이 規定한 民主的, 聯邦主義的, 法治國家的,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에 대한 認識 提高 ○ 法治行政과 能率的인 行政體系 構築을 위한 資質 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行政法등 必須 科目: 5週 ○ 컴퓨터등 選擇科目 : 1週
州政府 公務員, 地方行	新設 5個 州와 자 매결연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憲法秩序 ○ 州政府管轄 所管業務 	2 - 3 週

對 象	實施機關	教 育 重 點	教育期間
政機關 公務員	맺고있는 西獨地域 州政府教 育院에서 東獨地域 으로 教 育者派遣		
地方行 政機關 公務員	現場實習 教育 (西獨地域 地方公務 員이 現場 指導)	○ 地方行政 關聯 所管業務	

마. 東獨人民軍 解體와 聯邦軍 編入

- 1991.4.1부로 聯邦軍의 陸·海·空軍에 새로운 部隊를 設置, 東獨人民軍(東部聯邦軍)을 編入시킴과 동시에 東獨人民軍은 1991.6.30자로 解體됨. (9만명의 東獨市民軍은 '94년까지 5만명으로 減薪

○ 그러나 東獨人民軍 將校중 50%가 전역당했으며 (다른 公務員에 준하는 대기급여 수령), 殘留한 將校 및 下士官들도 西部獨逸에 派遣되어 政訓教育(2주이상)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2年동안의 試補期間을 거쳐 評價委員會의 決定에 따라 계속 勤務與否 決定

※ 獨·蘇 撤軍協定에 따라 1991年 5月末 현재 4만 1천명의 軍兵力, 9천명의 民間人, 26만톤의 物資가 撤收하였으나, 撤收軍人들의 家屋 建築問題를 둘러싸고 蘇聯軍의 撤收가 遲延되고 있어 94年 12月末까지 蘇聯軍 30만명이 豫定대로 撤收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바. 統一獨逸의 福祉政策

- 統獨後 單一화된 物價水準으로 볼 때 西獨人の 平均實質賃金은 2,300DM, 平均年金도 1,662DM인데 비해 東獨人の 平均實質賃金은 960DM, 標準年金 672DM, 社會福祉補助金 495DM에 불과하여 東獨市民들은 사실상 『2級 市民』으로 轉落해 있음.
- 그러나 東·西獨間의 經濟的·社會福祉的 格差를 메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財政需要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獨逸社會의 老齡化 傾向과 더불어 東獨地域에의 偏重支援은 全獨에서의 均衡的인 社會保障 政策과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2000年代 獨逸社會 福祉政策의 또다른 問題로 擡頭되고 있음.

- 특히 數年(7年 정도)내에 新設 5個州가 西獨地域과 等등한 經濟的 能力 및 所得水準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年間 10%이상의 成長을 達成해야 하는데, 事實상 이러한 經濟奇蹟은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임.

바. 積極的인 東獨地域 景氣活性化 圖謨

- 獨逸聯邦政府는 東獨地域에 대한 景氣浮揚策을 發表('91.3.8), 強力한 行政的 支援 講究
- 特別減價 상승, 投資補助金 支給 등 投資誘引措置를 통해 個人投資 및 企業新設 積極 獎勵
- 社會間接資本, 住宅 및 都市建設 및 公共投資를 早期에 發注, 雇傭創出과 他産業分野에의 波及 도모
- 統獨으로 經濟的 利得을 얻는 階層으로부터 一定額을 徵收, 統一費用 財源 擴大 措置

사. 教育統合

- 聯邦政府는 各 州政府와 協力하여 兩獨地域間 教育 制度 同一化, 教育施設 隔差解消를 위해 教科 改編, 教員 解雇, 職業教育 強化, 大學生 人員 調整 등을 實施하고 있음.

4. 評價 및 展望

- 獨逸統一 1주년에 즈음한 오늘날 統一獨逸의 國民經濟規模는 커졌으나, 東獨地域 經濟의 持續的인 下降으로 인해 經濟力은 오히려 後退한 實情임.
 - － 그 結果 統一獨逸의 1인당 GNP는 프랑스보다 낮아졌으며, 3%미만의 인플레이 維持時代는 지나갔고, 輸出額 第1位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음.
- 특히 “手術은 成功했으나 患者는 죽어버린 狀態” 처럼 東獨經濟가 崩壞됨으로써 統一獨逸의 經濟마저 威脅을 받고 있으며, 東獨地域에 市場經濟制度를 導入한데 따른 效果도 相當한 時日을 요하게 됨으로써 兩側地域 住民의 不滿이 高潮되고 있는 趨勢임.
- 아울러 獨逸政府는 迅速한 東獨經濟回復을 위해 税金 引上과 財政赤字 運營 등을 통해 統獨費用을 調達하고 있으나, 利率率 상승, 인플레이 憂慮, 마르크貨 信賴 下落 등 副作用에 직면해 있음.
- 基民黨 政權은 이와 같은 많은 問題點에도 不拘하고 2년안에 主要한 社會間接資本施設과 行政·司法體系가 確立되고 5년안에 東獨住民들이 受容할 수 있을

정도로 物質的인 生活水準이 西獨地域의 몫사는 州(30% 隔差)정도로 上昇할 것으로 樂觀하고 있음.

- 결국 東獨地域 經濟의 飛躍的인 發展에 의해 統一獨逸의 經濟力도 強化될 것이며, 新設 5個州의 行政·司法體系가 제대로 稼動될 경우, 統一의 副作用은 最小化할 것으로 보임.
- 단지 東獨地域 住民에 대한 再教育和 適應, 異質的 認識의 克服, 環境汚染 除去問題, 住居環境 改善 등은 相當期間이 지나야 解決이 可能할 것이며, 獨逸 政府의 各별한 努力이 要求되는 分野라 하겠음.

5. 南北統속에의 示唆點

- 일단 北韓體制가 開放·改革의 段階에 접어들게 된다면, 北韓政權이 崩壞되거나 殘存與否와는 상관 없이 南韓에 의한 吸收統一의 方向으로 統一過程이 進行될 것임.
 - 단지 現 南北關係는 統一前 獨逸에 비해 異質感이 極甚하고 軍事的 緊張이 尚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이 吸收統속에 대해 강한 拒否感을 갖고 있기 때문에 吸收統속의 與件이 未成熟된 狀態임.

- 따라서 各 部處別, 分野別로 南北統合對備計劃을 수립하되, 北韓體制의 變化樣相, 時期, 段階別 戰略 등을 綜合的으로 想定해야 할 것임.
 - 아울러 南北統合過程을 待機法令 등으로 具體化함으로써 過渡的 混亂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法令研究를 推進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총 2,000 - 4,000억 \$의 統一費用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90年度 韓國의 GNP 2,300억 \$)되는 바,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통해 統一費用을 自擔할 能力을 確保하는 한편, 北韓經濟를 市場經濟 構造로 轉換해 나가는데 있어 초래되는 副作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經濟力을 健實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임.
- 內需市場 擴大, 純外債 減少, 貿易收支 好轉 등
- 民主的 政黨制度和 地方自治制度를 早期에 定着시킴으로써 統一에 對備하는 한편, 政黨法, 選舉法 改編時이를 考慮토록 함.

1. 舊東·西獨의 地方行政體系上的 差異點

- 地方行政體系面에서 볼 때 舊西獨地域은 基本法(憲法) 第20條, 28條에 의해 聯邦主義(Foederalismus)原則이 確立되어 있었으나, 舊東獨地域에서는 共產黨의 領導原則아래 中央集權的 形態를 취함.
- 獨逸의 統一은 西獨의 聯邦主義에 기초한 地方分權主義가 東獨의 中央集權的인 抑壓體系에 대한 勝利라는 觀點에서도 把握할 수 있는 만큼, 統獨以後 西獨의 地方行政體系에 따른 舊東獨地域의 새로운 行政體系 構築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
- 舊西獨에서는 公共의 利益을 위해 統一的으로 規定되어야 할 部分(外交, 國防, 財政, 郵便, 水路管理, 領空管理, 國境守備)만 聯邦政府 管轄이고, 그 밖의 事項에 대해서는 各州政府和 地方自治團體가 管轄權을 가짐.
- 舊東獨에서는 “東獨地域人民代表에 관한 法”(Gesetz ueber die oertlichen Volksvertretung in der DDR) 第1條에 “地域人民代表는 SED의 領導아래 各政黨이 망라된 民族戰線과 大衆社會組織과 協調하여 發展된 社會主義 創造와 勞動者, 農民權力의 實現을 위해 努力하며, 그 基本指針은 民主的 集中主義原則(Demokratischer Zentralismus)이다”라고 明示하고 있음.

- 地域行政의 가장 最高 意思決定機關은 地域 人民委員會(Raete)이며, 委員長(Ratsvorsitzende, 西獨의 市長·郡守에 해당)이 보통 17명으로 構成되어 있는 各分野 分科委員을 統率하며, 上部인 Bezirk(舊東獨은 過去 分斷 以前의 州를 없애고 地方을 15개 管區로 나누었음)와 그 上部인 閣僚會議(Ministerrat)의 指示를 받음.
- 따라서 地方自治라는 概念은 1950년이래 舊東獨에서는 存在하지 않았으며, 主要한 決定事項은 中央政府로부터 指示를 받아 地域人民委員會가 處理함.
- 또 西獨地域과 다른 점은 住民들의 生活과 密接한 분야인 上下水道, 住宅, 社會·文化施設 管理 등의 業務는 國有企業에 의해 處理되었다는 事實임.

2. 新設 5個州의 地方行政體系 構築

- 統獨과 더불어 舊東獨地域에는 비로소 1950年代 없 어졌던 新設 5個州가 復活되고, 舊西獨地域의 地方 自治形態(Stadte, Gemeinde, Kreise)에 따라 새로 운 地方行政體系가 構築되어야 했음.
- 따라서 새로운 體系構築에는 行政機構 再編, 人力 充員, 財政自立度 向上 등 수 많은 課題의 解決이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聯邦 內務省과 舊西獨의 州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는 人力·物資支援, 財政支援 등을 통해 舊東獨 의 地方行政體系 構築을 支援하고 있음.
- 한편 舊西獨의 各 地方行政機關의 聯合會는 行政 의 聯邦主義에 의거 各 地方行政機構의 最高 意 思決定機關으로서, 舊東獨에 新設된 各 Staedte (中·大都市에 해당), Gemeinde (小都市, 邑에 해당), Landkreise(郡에 해당)의 會員加入을 推 進하고 있으며, 一線에서 西獨으로부터의 行政 支援을 總括하고 있음.

3. 舊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을 위한 舊西獨의 支援

- 統獨이 되기전 '90年初부터 舊西獨側은 舊東獨地域의 地方行政體系 構築을 위해 각종 形態의 行政支援을 提供해 왔음.
 - 이미 東·西獨間 交流協力期間中 맺어졌던 都市間 姊妹結緣(staedtepartnerschaft) 通路를 통해 주로 初期에는 物資支援을 提供했음.
 - 通信手段(전화, 팩시밀리), 各種 情報油印物 提供
 - '90年代 中盤부터는 새로이 諮問, 세미나 강사 派遣, 行政人力 派遣 등 人的資源이 增加하였고, 建築資材, 自動車, 事務用 什器 등의 支援도 행해짐.
 - 統獨以後에는 統合條約 第15條 (“聯邦政府와 舊西獨의 州政府는 新設 5個州 行政體系 確立에 行政支援함”)에 따라 體系的인 行政支援이 이루어짐.
 - 行政諮問團의 組織·派遣
 - 常駐專門人力 派遣 : 聯邦內務省은 人力派遣에 따른 補助基金을 '91·'92년 각각 1억 DM씩 計上함.

- 舊東獨地域 公務員에 대한 再教育, 職業教育 支援

— 상기 行政支援을 效率的이고, 體系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聯邦內務省, 各 州內務省, 各 地方行政機關 聯合會側은 긴밀히 協調하고 있음.

- '90.7.29 西獨의 各 州內務長官 會議에서는 既存의 東·西獨間 都市姉妹結緣 形態로는 舊東獨의 中·小都市가 말라되어 있지 않아(舊東獨의 5만이상 都市는 거의 西獨과 姉妹結緣을 맺고 있었음) 西獨側으로부터 충분한 行政支援을 받을 수 없다고 判斷하고, 또 서로의 重複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어떤 西獨의 州가 舊東獨의 어느 地域을 管轄하여 行政支援할 것인가를 決定함.

4. 舊東獨 地方行政體系 構築에 있어서의 問題點

○ 財政自立度 脆弱

- 經濟沈滯 및 國有財產 私有化 不振, 稅務行政體系 未洽으로 인한 稅收不足

- 租稅收入 現況을 보면, 舊東獨地域의 각 州는 舊西獨地域의 1/3, 地方自治團體는 1/10 水準인데, 이로 말미암아 各 地方政府는 社會間接資本 投資를 통한 地域經濟 活性化를 期待할 수 없는 형편임.

- 專門行政人力 不足, 殘留 公務員들의 舊體制 思考方式 尚存
 - 過去 共產黨과 國有企業이 擔當하던 業務를 이제 行政機關 스스로가 責任과 權限을 갖고 自發的으로 해야 하는 바, 대부분 中央集權的인 行政形態에 젖어 있어 地方行政體系에 상응하는 行政文化와 業務處理 姿勢가 缺乏되어 있음.

- 특히 地方行政機關의 上位職은 모든 舊體制와 關聯한 過去 權力이 없는 人士들로 새로이 採用되었는 바, 이들은 전혀 行政經驗이 없으며, 再任用된 殘留公務員들과 갈등이 存在하고 있음.
- 經濟·會計·財政·社會福祉 分野 등 새로운 體制에 상응하는 法執行能力을 가진 行政人力 必要性이 절실히 要求되고 있음

5. 西獨側 行政支援上의 問題點

- 行政支援 形態가 단지 西獨地域의 行政形態와 思考方式을 單純하게 移轉·強要하는 方式으로서는 成功을 거둘 수 없고, 실제 行政行爲에 舊西獨의 專門家가 西獨의 Knowhow를 直接 適用하여, 舊東獨의 行政家와 結果에 대해 서로의 意見을 交換하여 그 地域에 適한 支援形態를 抽出해내는 “ Learning by doing” 方式을 採擇해야 함.
- 舊東獨地域에서 發生하고 있는 問題들은 歷史上 由來가 없는 體制轉換의 問題이므로 能力있는 專門家が 派遣되어야 하며, 觀光旅行式의 短期間 派遣은 禁物이고 相互信賴에 基礎한 持續的인 支援이 이루어 져야 함.

兩獨間 財産權 處理에 관한 合意

(향후 재산권 처리는 통합조약 제41조에 의거하여
마련된 본 합의사항을 따르게 됨)

('90.10)

1. 1945 - 49 년 사이에 동독지역에서 소련군정청의 공권력 발동에 의해 몰수된 재산은 반환되지 않음. 소련정부와 동독정부는 당시 취해진 조치 (토지개혁을 지칭함) 를 수정할 수 없음. 서독정부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 (통독과정중 외적 측면을 지칭함) 을 고려하여 위의 사항을 준수토록 함. 향후 새로이 구성될 통독의회가 국가차원에서의 적절한 보상조치를 최종 결정하도록 서독정부는 강구함.
2. 부동산·공장부지, 그밖의 재산에 대한 신탁관리와 사용제한 조치는 철회됨. 정치적 망명이나 그밖의 이유로 동독국가 행정기관으로 흡수된 재산에 관한 처분권은 전소유주에게 반환됨.
3. 몰수된 부동산 재산이 다음 a), b)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과거 소유주나 그 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 토지나 건물이 공유재산으로 헌납되었거나, 공동 주택지 조성을 위해 전환 사용되었거나, 공장부지로 사용되었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데 편입되어 그 원래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유권 반환은 불가능함.

이러한 사례는, 동독주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의해 사전 보상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보상조치를 받음.

- 가. 만약 동독주민이 양도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이나 물적 사용권을 정당하게 취득했을 경우, 이의 상쇄는 동가의 재산물로 교환되거나 혹은 보상의 방법을 통해 사회계약적 차원에서 치루어짐. 이 규정은 또한 국가신탁관리인에 의해 제3자에게 매각된 재산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효함. 이 문제는 세부규정을 요청함.
- 나. 위임된 재산에 대한 반환권이 이전 수유자나 그 상속인에게 있을 경우, 반환대신 보상이 행해질 수 있음.

자산 평가액 변동에 따른 보상문제는 특별규정을 두기로 함.

- 4. 제3항의 규정은 경제적인 강제조치를 이유로 인민공유재산으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그 임무수행자에 의해 관리되어 오는 주택지의 경우에도 아울러 적용됨.
- 5. 본 성명내용에 저촉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동독주민의 기존 사용권 및 세입주자 보호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장되며, 이는 기존 동독법령에 따라 규정됨.
- 6. 행정관리하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처분 제한이 철회됨. 원 소유자가 기업의 재산을 인수함.

1972년 인민공유재산으로 몰수된 기업과 자본지분에 대해서는 1990. 3. 7일 제정된 “사유기업의 창설·활동 및 기업지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이와 관련하여 동 법률 19조 2항 4절은, 국가지분이 사유단체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해석 적용됨. 매각결정은 관할부서의 감정절차없이 처리됨.

7. 1949 - 72년까지 인민공유재산으로 몰수된 기업과 자본지분은 사업체의 장차 있을 재산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혹은 자본지분 내지는 주식의 형태로 전소유주에게 양도됨. 이는 전소유주가 보상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됨. 이 건은 세부규정을 요청함.
8. 재산내역이 - 사용권을 포함하여 - 부적법한 방식 (예를 들어 권력오용, 부정, 또는 재산 취득자의 사기 내지는 강요)에 형성된 경우는, 취득된 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동시에 반환되지도 않음. 정당하게 형성된 재산건에 대해서는 3번 b항이 적용됨.
9. 재산몰수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례와 관련하여 동독정부는 이들의 수정을 위한 법적 테두리를 마련해야 함.
10. 대부 및 채권에 대한 서독시민의 지분은 1990년 제2기분 - 화폐통합이후까지 - 이자까지 포함하여 처리됨.
11. 지불과정상 현존하는 외국환 제한조치는 화폐·경제·사회 통합의 발효와 더불어 폐지됨.

1 2. 법인체 청산법을 근거로 하여 서독 정부기관을 통해 신탁 관리되어 오던, 동독 소재 공법기관의 재산은 법적 권리인 내지는 그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됨.

1 3. 청산규정

- a) 동독정부는 필요한 법류지침과 절차상의 규정을 즉각 제정해야 함.
- b) 동독정부는, 해당 시민들이 어느기관에 언제까지 그들의 청구권을 신고해야 할 지를 공표해야 함. 신고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
- c) 보상청구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도의, 법률적으로 독자적인 보상기금이 동독내에 설치됨.
- d) 동독정부는, 13번 b) 항에 따른 기간 만료시까지 과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지와 건물들이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이는 당사자 쌍방이 반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과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1989. 10. 18일 이후 양도 매각된 부동산과 건물들은 차후 심사를 받는다.

1 4. 양독정부는 기타 세부사항들의 확정임무를 전문가들에게 부과함.

獨逸의 貨幣·經濟·社會統合은 當時 狀況上
不可避한 選擇이었으며, 成果는 施行段階에 있기
때문에 未知數라는데 衆論

- 東·西獨間 國家的 統一에 앞서 實施되었던 貨幣·
經濟·社會統合('90. 7. 1 發效)이후 1년간에 대한
評價는, 當時 狀況으로 보아서는 다른 代案이 없었
다는 것이 衆論이나 國家的 統一에 이은 東·西獨
地域間 生活水準 隔差의 解消라는 側面에서 보면
그 成果는 아직 未知數임.
- 당시 野黨인 社民黨과 많은 經濟學者들은 性急
한 統合에 대해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며 慎重論
을 폈으나 東獨住民들의 移住民 물결을 막고
(한달 平均 20萬), 國際政治적으로 有利하게
展開되는 狀況을 이용하여 民族的 課題 達成을
앞당기기 위해 취해진 政治的 決斷에 따른 것이
었음.
- 通貨統合을 늦추고 대신 一種의 國家聯合方式에
立脚한 긴 過渡期間을 設定하고 東獨의 體制를
서서히 市場經濟體制로 編入시킨다는 論理는 當
時 東獨住民들의 無條件的인 統一熱望 情緒와는
背馳되는 것이었음.

-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날 東·西獨 地域 住民들은 經濟的 構造 改編作業이 苦痛을 隨伴할 수 밖에 없고, 東獨地域에 市場經濟制度 導入에 따른 效果가 상당한 時日을 要하게 될 것이라는 事實을 깨닫게 되자, 舊東獨地域에서는 勇氣와 希望이 사라진 반면, 舊西獨地域에서는 統一負擔때문에 不滿이 漸增하고 있음.

“手術은 成功했으나 患者는 죽어버린” 狀態처럼 統獨經濟의 規模는 커졌으나 經濟力은 오히려 後退, 兩側地域 住民不滿 高潮

- o 貨幣·經濟·社會統合 1周年이 지난 오늘날 統一獨逸의 國民經濟 規模는 커졌으나, 經濟力이 강해지지 않는 못했다는 評價가 大部分인데 마치 “手術은 成功했으나 患者는 죽어버린” 現象에 비유되고 있음.
- 東獨地域 經濟의 持續的인 下降으로 統一獨逸의 1人當 GNP는 프랑스보다 낮아졌으며, 3%미만의 인플레이 維持時代는 지나갔고, 輸出額 第1位의 位置도 흔들리고 있음.

- 가장 深刻한 問題는 東獨地域의 失業問題로서 總就業人口(統獨以前 約900萬)중 3분의 1이 失業 또는 短縮操業 狀態에 있으며, 많은 研究機關 發表에 의하면 '91年末까지 失業 170萬, 短縮操業 200萬등 東獨地域만 40%의 失業事態가 豫想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東獨地域 住民들은 자신이 創出하는 經濟生産能力의 두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있으며(이는 물론 西獨地域으로 부터의 莫大한 移轉支出에 힘입은 것임), 西獨地域 住民들은 東獨에 提供해야 하는 이러한 費用을 支辨하기 위해 적절한 豫算方法을 考案해내지 못하고, 結局 政府의 税金引上과 財政赤字 財政運營 方式을 감수하고 있음.
- 基本法(憲法) 106條에 明示된 “全聯邦地域에서의 同等한 生活條件의 創出”을 위해서는 西紀 2000년까지 西獨地域보다 東獨地域에서 每年 5배의 高度成長을 記錄해야 하는 것으로 專門家들은 評價하고 있음.
- 더구나 이를 위해서는 2000년까지 聯邦政府의 東獨地域 新設 5個州에 대한 財政移轉費用이 每年 1,000億-1,500億 DM정도가 所要되어야 한다고, 舊東獨 삭센州知事 Biedenkopf(基民黨)은 말하고 있음.

獨逸政府는 迅速한 東獨經濟 回復을 위해 税金
引上과 財政赤字 運營등을 통해 統獨費用을 調
達하고 있으나, 利率 上昇, 인플레이 憂慮, 마
르크貨 信賴下落등 副作用 招來

○ 獨逸聯邦政府는 이러한 統獨費用 支辨을 위해 두가
지 方法에 依存하고 있는 바,

① 税金引上 措置를 통해 稅入을 늘리고 있음.

— '91. 7. 1부터 賃金과 給料등 個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1ℓ 휘발유당 25페니히
追加稅, 電話使用料, 保險稅, 自動車稅 등의
税金引上과 各種 年金 및 失業保險 納入金の
引上등으로 子女가 2명이고 月收入이 3,500DM
인 家口는 한달에 820DM(연간 약 1000DM)을 더
負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Der Spiegel誌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統獨費
用 支辨을 위한 税金引上으로 각 個人當 平均
擔稅率은 '90년의 41.5%에는 '94년에는 45.2
%로 增加될 것으로 展望함.

獨逸政府는 迅速한 東獨經濟 回復을 위해 税金
引上과 財政赤字 運營등을 통해 統獨費用을 調
達하고 있으나, 利率 上昇, 인플레이 憂慮, 마
르크貨 信賴下落등 副作用 招來

○ 獨逸聯邦政府는 이러한 統獨費用 支辨을 위해 두가
지 方法에 依存하고 있는 바,

① 税金引上 措置를 통해 稅入을 늘리고 있음.

- '91. 7. 1부터 賃金과 給料등 個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1ℓ 휘발유당 25페니히
追加稅, 電話使用料, 保險稅, 自動車稅 등의
税金引上과 各種 年金 및 失業保險 納入金の
引上등으로 子女가 2명이고 月收入이 3500DM
인 家口는 한달에 820DM(연간 약 1000DM)을 더
負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Der Spiegel誌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統獨費
用 支辨을 위한 税金引上으로 각 個人當 平均
擔稅率은 '90년의 41.5%에는 '94년에는 45.2
%로 增加될 것으로 展望함.

- 당장의 國家財政 缺損을 매꾸기위한 不可避한 措置이나 “ 税金引上 없는 統獨 ” 이란 約束을 全獨總選에서 내건 바 있는 韓首相 政府의 信賴問題가 政治爭點化 되고 있음 .
- ② 世帶間 負擔 配分方式이라 할 수 있는 赤字財政 運用을 들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問題點이 指摘 되고 있음 .
- 持續的인 公共部分의 資本市場 借入增加는 利率을 上昇시켜 投資를 沮害하게 되는 바 , 결국 東獨地域의 投資를 萎縮시켜 長期的으로 東獨再建이 어려워짐 .
 - 계속되는 財政赤字 累計에 의한 支拂利率 增加는 國家의 財政的 여유를 壓迫하는 바 , 현재 1조 3천억 DM으로 推定되는 赤字累計額에 대한 支拂利率만도 全體 豫算의 10%를 차지 하고 있음 .
 - 國際的 投資者들이 獨逸의 방만한 膨脹豫算 運用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憂慮하게 될 경우 硬貨로서의 마르크貨는 信賴가 喪失될 것임 .

基民黨政府는 많은 問題點에도不拘, 5年안에 東獨住民의 物質的인 生活水準이 西獨地域의 못사는 州(30%隔差)정도로 上昇할 것으로 樂觀

- 基民黨政府는 이와같은 많은 問題點에도不拘하고 2年안에 主要한 社會間接資本施設과 行政·司法體系가 確立이 되고, 5年안에 東獨住民들이 受容할 수 있는 物質的인 同等한 生活條件의 創出이 可能하다고 樂觀論을 堅持하고 있음.
- 5年안에 東獨地域의 生産力이 增加하여 經濟水準의 隔差가 과거 西獨地域의 잘사는 州와 못사는 州(예를들어 잘사는 헛센州와 못사는 슐레스비히 홀스타인州간의 個人所得 격차는 27%정도 差異가 남)간의 차이로 좁혀질 것이라고 함.
- '91년 西獨에서 東獨으로 財政移轉 支出額 1,400억 DM(聯邦政府 總豫算規模 4,000억 DM와 比較해 볼 때 엄청난 額數임)을 통해 현재 '91 東獨地域 GNP總規模 2,000억 DM水準의 經濟가 飛躍的으로 發展할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함.
- 다만 環境汚染 除去問題와 住居環境 改善問題는 相當期間이 지나야 解決이 可能的인 問題로 보고 있으며, 西獨水準으로 東獨地域의 環境淨化 施設 投資에 所要되는 費用은 약 2,000억 DM으로 推定되고 있음.

I . 舊東獨地域新設州政府・地方自治團體의 財政自立度 脆弱

1. 原因 (稅入激減)

- 舊東獨地域 企業의 倒産으로 法人稅 部門稅收 不振
- 舊西獨地域에 비해 所得水準이 낮아 (平均 50-60%) 個人所得稅 部門 稅收 不振
- 國有財產의 私有化 不振으로 財產稅 部門 稅收 不振
- 稅務行政體系의 未確立으로 稅源捕捉 未洽

2. 對策 (稅入增大)

- '91 舊東獨地域州는 舊西獨地域州의 1/3, 地方自治團體는 1/10 水準
- '95까지 東獨地域 經濟再建으로 그 格差가 줄어들 것이 豫想되나 1/2水準 維持 推定

< 住民 1人當 租稅收入 現況 > (推移) (單位 : DM)

	'91	'92	'95
舊西獨地域州	3,300	3,500	4,300
舊東獨地域州	1,150	1,300	2,100
舊西獨地自團體	1,300	1,400	1,650
舊東獨地自團體	150	300	800

II . 舊東獨地域 再建을 위한 財政支出 增加

1. 原 因

- 東西獨 地域間 生活格差 解消(經濟的인 所得水準 側面에서 과거 西獨의 잘사는 州와 못사는 州間의 差異程度로 把握)를 위한 財政移轉 支出費用
 - 東獨地域은 西獨地域보다 每年 5倍以上의 經濟 成長을 記錄해야 하며, 2000년까지 每年 1,000-1,500億 DM 所要推定

〈 統獨에 따른 主要費用 推定치 〉

- 蘇聯軍 撤收費用 : 130億 DM
- 舊東獨政府 財政赤字 引受分 : 300億 DM
- 舊東獨 對外債務 引受分 : 300億 DM
- 信託廳 借入金 : 900億 DM
- 過去 東獨國有企業의 舊債務 引受分 : 1,000億 DM
- 舊東獨地域 住宅 補修維持·現代化 : 500億 DM
- 舊東獨 農業構造 再編을 위한 支援金 : 70億 DM
- 舊東獨地域 交通網 改善 (西獨水準) :
: 總 1,270億 DM
(鐵道 480億 DM, 道路 700億 DM, 海運 80億 DM,
空港 10億 DM)
- 舊東獨地域 環境淨化施設 投資 : 2,000億 DM
- 舊東獨地域 郵便·通信分野 施設投資 : 550億 DM
- 東·西獨地域間 教育環境 格差 解消 : 700億 DM
- 에너지 産業設備 現代化 : 1,000億 DM

2. 對 策

- 産業構造 再編을 위한 投資는 民間企業에 委任하고 있으며, 政府는 投資의 活性化와 産業立地 強化를 위해 公共投資(社會間接資本·環境保護·教育·에너지部門)에 注力함.
- 各種 財源 調達 手段

① “獨逸統一基金”에 의한 支援 : '94년에는 完全 消盡

< 年度別 支援額 >

(單位 : 10億 DM)

年 度	'90 下半期	'91	'92	'93	'94	總額
支援額	22	35	28	20	10	115

(住民數에 比例하여 各州·地方自治團體에 財政支援)

② 税金引上措置를 통한 財源마련

- '91. 7. 1 부터 2年間 投資에 障礙가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限時的으로 引上

- 引上内容 : 個人 및 法人所得에 대한 7.5% 追加課稅, 石油稅(휘발류 1리터당 25pf 追加), 保險稅, 自動車稅, 담배稅

< 各 住民들 追加負擔額 >

(單位 : DM)

每 月 所 得	追 加 負 擔 額	
	獨身者 家庭	2명의 子女가 있는 家庭
1,400	32.80	25.50
2,000	41.10	25.60
3,500	84.40	58.50
5,000	118.50	82.80
6,500	158.80	111.60
8,000	223.20	160.60
10,000	294.80	206.50

< 住民 個人所得에 대한 擔稅率 變化推移 >

(單位 : %)

年 度	'70	'75	'80	'85	'90	'91	'95
담세율	33.9	36.6	39.3	42	41.5	43	45.2

③ 赤字財政運用

- 世代間 負擔配分 方式이라할 수 있는 持續的 赤字財政 運用은 公共部門의 資本市場 借入을 增加시키고, 結局 利子率 上昇으로 인한 投資沮害로 東獨地域의 再建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放慢한 膨脹豫算 運用은 硬貨로서 마르크貨의 信賴問題와도 關聯되어 相當한 批判이 擡頭되고 있음.

< 公共部門 赤字 累計額 >

(單位: 10億 DM)

年 度	'85	'86	'87	'88	'89	'90	'91
赤字額	847	894	951	1010	1039	1171	1300

(聯邦鐵道, 聯邦郵便 赤字包含)

④ 各種特別賦課金 導入 檢討

- 環境淨化施設 改修를 目的으로 環境特別賦課金
- 東獨地域 雇傭促進을 위해 失業手當 寄與金 增額 등

⑤ 統獨으로 經濟的 利得을 누린階層으로 부터 一定額 徵收, 基金造成方案 檢討

- 移轉 沒收財産을 返還 받는 사람으로 부터 一定額 徵收
- 移轉 沒收財産에 대해 補償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一定額 徵收

憲法裁判所 判決

('91.8)

- 憲法裁判所는 '91.4.23 統合條約 規程中 4條 Nr. 5와 41條에 依據 蘇聯占領軍 治下에서 ('45 - '48) 斷行된 土地改革으로 인해 沒收당한 財産(약 320만 ha, 舊東獨地域 土地의 1/3)을 不返還하기로 한 決定의 違憲與否 審査에서 만장일치로 合憲判決을 내림.
 - 蘇聯과 舊東獨政權은 東·西獨間 統合條約과 2+4會談 協商過程에서 獨逸統一의 前提條件으로서 이를 관철시켰고, 반면 原所有者들은 基本法上 保障된 財産權 神聖不可侵性을 들어 返還을 주장했었음.
- 訴冤提起者들은 上記 統合條約의 規定들이 基本法(憲法) 制 3條(平等權), 制 14條(財産權), 制 79條(基本法 改正不可事由)에 違背된다고 主張했으나 裁判部는 이유없다고 合憲判決을 내림.
 - 統合條約 4條 Nr. 5에 基本法 143條 3項에 插入된 上記 沒收財産의 不返還 方針은, 79條 基本法 改正不可事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 “ 당시 西獨의 國家權力이 事實上 그리고 法律的으로 東獨地域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勘案하면, 마치 外國의 國家權力作用에 의한 諸般措置에 대해 그 어떤 責任을 질 수 없듯이 당시 蘇聯 占領軍이 행한 沒收措置에 대해서도 責任을 질 수 없으므로” 基本法 制 14條 (財産權)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함 .
- 다만 基本法 制 3條 (平等權)에 依據 立法權者는 事後 報償에 관한 적절한 規定을 마련할 것을 判示함 .
 - 이 判決에 依據 財務部는 現在, 過去 沒收財産 報償에 관한 立法 推進中임 .

I . 信託廳의 組織 및 任務

- 信託廳은 東獨 國營企業의 私有化 推進機構로서 聯邦政府의 財務省이나 經濟省보다 東獨의 將來를 決定하는데 더 많은 權力을 行使하고 있음 .
- 組織 構成은 株式會社와 類似하나 公的인 法人으로서 首相의 監督을 받으며 , 上院과 下院에 각각 報告義務를 갖고 있음 .
 - 行政實務委員 (Verwaltungsraete) : 6名
 - 理事會 (Verstandsmitglieder) : 5名
 - 委託株式會社 (Treuhandaktiongesellschaft) : 5個
- 任 務
 - 8000개 東獨國營企業의 將來 決定 (整理, 處分 혹은 財政補助後 措置 등)
 - 東獨國營企業의 賣却價格 決定
 - 人民所有 不動產과 林野 處理問題
 - 各 企業이 創出한 利潤의 處理問題
- 設置根據
 - “ 人民所有財產의 私有化와 再調整에 관한 法律 ” (『信託法』으로 통칭, '90年 7月 1日 發效)

Ⅱ . 蘇聯占領下 舊東獨地域 沒收財產 處理問題

1 . 財產權 處理에 관한 合意 ('90.6.15)

- 蘇聯軍 占領('45 - '49)下에서 土地改革에 의해 이루어진 沒收財產은 返還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함 .
 - 蘇聯과 東獨政府는 당시 취해진 措置를 撤回하지 않기를 희망
 - 西獨政府는 統獨에 따른 對外的 마찰을 줄이기 위해 統獨議會에서 國家補償 次元에서 考慮하도록 決定 留保

2 . 憲法裁判所 判決

- “ 당시 西獨의 國家權力이 事實上 그리고 法律的으로 東獨地域에 미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勘案하면, 마치 外國의 國家權力 作用에 의한 諸般 措置에 대해 그 어떤 責任을 질 수 없듯이 당시 蘇聯占領軍이 行한 沒收措置에 대해서도 責任을 질 수 없으므로” 基本法 第14條 (財產權)에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判示함 .

- 다만 基本法 第3條(平等權)에 의거, 立法權者는 事後 補償에 관한 적절한 規定을 마련할 것을 判示함. 이 判決에 의거 財務省은 現在, 過去 沒收財産 補償에 관한 立法을 進行中임.

Ⅲ. 返還 또는 賠償 가능한 財産權

- '49年以後 沒收된 다음과 같은 財産에 관해서는 '90.10.31까지 政府가 申告를 받아 返還 또는 賠償與否를 決定함.
- 申告對象 請求權
 - 押收 또는 信託管理된 亡命者의 資産
 - 1945.5.8부터 1953.6.11까지의 期間동안 現 東獨地域에 常住한 적이 없거나 適法하게 東獨으로부터 出國한 者로서 上記 期間內에 이미 西獨國民이 된 者의 所屬財産이기 때문에 臨時로 國家의 管理下에 있는 財産
 - 國家의 管理下에 있는 外國 財産
 - 前 所有權者가 取得者, 國家機關 또는 第3者의 不法한 行爲로 인하여 喪失한 財産

- 高額の賃借料 및 이로 인하여 發生한 債務의 重課로 인하여 押留, 所有權 拋棄, 贈與(無償讓渡 包含) 또는 相續權 拋棄를 통하여 公有 財産으로 된 宅地
- 1952.3.20 破産된 農家에 관한 法令(CBL NO, 38. 226페이지)에 의하여, 1953.2.19 以前에 所有權者의 勤務能力 또는 財政難으로 인하여 信託管理下에 있게 된 農家の 請求權
- 以前 所有者들은 東獨에서 마지막 살았던 곳의 地方行政機關이나, 居住地가 없던 所有者들은 그 財産이 位置한 곳의 地方行政機關에 財産의 內容을 자세히 記載하고, 登記簿 寫本이나 證據寫眞을 添附하여 申告를 해야 함.
- 추후 締結된 統合條約 41條에 의하면 이러한 財産이 다 返還되는 것은 아니고, 東獨地域의 投資를 促進하기 위해 特別法律로 規定되는 垆地나 建物の 경우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必要不可缺하다고 判斷될 경우 現 賣買價格으로 補償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IV . 過去 東獨政權에 의해 強制로 沒收된 財産權 의 返還問題

1 . 論難의 展開

- 舊東獨地域 投資障礙의 가장 核心要因으로 꼽히고 있는 過去 東獨政權에 의해 強制로 沒收된 財産權의 返還 및 處理의 遲延問題가 政治圈에서 舊東獨地域 再建問題와 관련하여 최대의 爭點으로 떠오르고 있음 .
 - 信託廳이 過去 公有企業과 財産을 賣却, 私有化하여 東獨地域의 經濟構造를 改編하려 해도 法的인 所有關係가 不分明하여 企業들이 引受를 꺼리고 있고
 - 元所有者가 該當財産을 生産手段으로서 認識, 投資를 통한 經濟活性化와 雇傭創出을 위해 使用하기 보다는 단순한 財産增殖을 위해 계속 所有權만을 保有하려는 傾向이 있어, 東獨地域의 經濟는 계속 沈滯되고 失業者는 늘어 社會的 緊張이 高潮되고 있음 . 따라서 적절한 對應策과 法案制定이 立法者들에게 主要課題로 擡頭되고 있음 .

- 企業家들은 東獨地域 投資計劃을 세우려 해도 元所有者가 不分明한 경우는 後日の 法的인 紛爭 可能性이 있어 꺼리고 있고, 元所有者가 確定的인 경우라 하더라도 元所有者가 明確한 意思 決定을 하지 않아 投資가 挫折된 경우도 있음.
- 이에 대한 對應策으로 政治家들 사이에 投資 促進을 위해 “ 返還보다는 補償을 통한 조속한 法的所有權 確定” 立場이 擡頭되고 있음.
 - 이러한 主張이 貫徹되기 위해서는 우선 統合 條約內에 規定된 基本原則의 改正이 前提되어야 하며, 憲法學的으로 볼 때 獨逸基本法 條項中 關聯 條項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下의 核心部分에 속하는 條項이므로 原則變更에는 상당한 論難이 豫想됨.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法的인 側面에서 바이마르憲法이래 社會的 公共福利 增進을 위해 神聖不可侵한 財產權이라도 制限할 수 있는 裁量權이 立法權者에게 주어져 있다는 憲法精神中の 社會國家的 原則을 들어 “ 返還보다 補償 優先” 을 主張하고 있음.

2. 政府의 最終立場

- '91.3.12 自民黨內에서 Moellermann 經濟相과 Kinkel 法務相은 論難을 거듭한 끝에 既存 統合條約의 “ 補償보다 返還 ” 의 原則은 지키되, 投資促進을 위해 廣範圍하게 例外를 認定한다는 線에서 妥協을 하고, 이러한 案을 聯政內의 基民黨에서도 受諾함으로써 政府의 最終 立場이 決定되었음 .
 - 不動産(土地, 建物)의 경우는 다른 投資者가 雇傭을 創出하거나 住宅問題 解決에 기여하거나, 社會間接資本施設 擴充에 參與할 때는 元所有者의 所有權 返還 要求는 撤回되고 補償만 이루어짐 .
 - 企業의 경우는 새로운 買入者가 雇傭을 創出하거나 企業의 競爭力을 向上시킬 경우나, 과거 所有者가 더 이상 企業을 運營할 意思가 없는 경우 返還要求는 撤回되고, 다른 投資者에게 賣却됨
 - 그러나 基本法 14條의 私有 財產權 保障 條項에 制限을 가하는 이러한 決定은 東獨 地域의 投資促進과 景氣浮揚을 위해 限時的으로 '92年末까지만 有效함 .

- 上記 條件에 該當되어 返還申請이 撤回되는 以前 所有權者들은 補償을 받게 되는데, 現 去來市價와 현재한 差異가 날 경우 差額 補償金을 追加로 받게 됨.
- 관련 所有財産은 公共法人 (地方行政機關, 州政府, 聯邦政府)과 信託廳 管理下의 財産에 限定하며, 信託廳과 該當機關이 上記 條件 充足與否에 관한 決定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投資節次를 簡素化함.
- 關聯財産을 賣却할 때는 以前 所有者에게 該當機關 또는 信託廳이 意見開陳의 機會를 賦與해야 하며, 즉시 決定事項이 通告되어야 함.
 - 그러나 元所有者의 問題提起나 反對意思 表明이 있다고 해서 그 賣却決定 履行이 遲延될 수 없음

V . 信託廳 私有化 實績

- 信託廳은 1991.5.31 현재까지 2,140 企業體를 私有化시킴 .
- 私有化는 4月부터 增加趨勢를 보이기 시작 , 5月에는 544 企業體로 最高 實績을 보임 .
- 地域別로는 Sachsen州(2위 : Brandenburg州)가 월등한 記錄을 세움 .
- 私有化 實績

	90 .	91 . 1	91 . 2	91 . 3	91 . 4	91 . 5	계
본사	180	57	69	72	62	172	612
지사	228	198	229	228	273	372	1,528
총계	408	255	298	300	335	544	2,140

資料提供 : 駐獨大使館

1. 序 言

- 아래 報告書는 舊東獨의 經濟學者 <舊東獨 學術院 會員이자, 中央經濟學術院(Zentralinstitu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 副所長>인 Harry Maier 가 舊東獨 經濟를 再建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市場 經濟秩序의 完全한 編入, 또는 私有化를 통해 舊東獨 經濟의 潛在力을 解體시키지 말고,

潛在力을 최대한 活用하여 産業構造 調整政策을 통해 점차적으로 統合시켜 나가도록 過渡期的인 混合 經濟政策 戰略(eine gemischtwirtschaftliche Strategie)을 펴야한다는 要旨의 글 “Integration statt Zerstoerer fuer eine gemischtwirtschaftliche Strategie in den neuen Laender” (Aus Politil und Zeitgeschichte 91.7.12 掲載)을 要約한 것임.

- 이 論文이 흥미로운 것은 舊西獨의 經濟研究機關 이나 經濟政策 推進機關들이 既存의 舊東獨經濟를 過小評價하고 빠른 私有化를 통해 舊東獨經濟의 完全한 市場經濟 編入을 主張하는데 반해,

舊東獨 出身으로서 一方的 經濟統合에 따른 社會的인 問題 發生 可能性을 우려, 舊東獨經濟의 肯定的인 側面을 살려나가는 漸進的인 混合經濟政策을 代案으로 提示하고 있다는 점임.

2. 舊東獨經濟의 市場經濟로의 改編에 따른 問題點

- 舊東獨經濟의 社會的 市場經濟로의 構造改編에 따라 發生하는 問題點들은 舊東獨의 既存 經濟潛在力을 제대로 評價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構造調整過程에 舊東獨 經濟를 編入시키지 못한데 原因이 있음.
- 西獨 DM의 東獨地域 導入이 不可避했고 이에 따라 모든 舊東獨의 財貨가 價值切上됨에 따라 生産力은 低調한 가운데 生産費 上昇으로 거의 모든 生産製品이 競爭力을 喪失하게 되고 東獨地域 住民들은 커다란 經濟·社會的 難關에 봉착하게 됨.
- 全體 GNP는 '90年度 下半期에 27.5%, '91年度 上半期에 25%가 減少했으며, 특히 製造業 部門의 生産量은 '90年度 下半期에 57.7%가 減少했음.
- 總 就業人口는 '89년도 960만명에서 早期停年, 失業待機(Warteschleife), 西獨地域으로 移住 등으로 '91年度 前半期에 780萬名으로 줄었으며, 앞으로 240萬名의 失業과 100萬名의 短縮操業 勤勞者가 發生할 것으로 豫想됨.

- 附加價值 生産 側面에서 東·西獨間의 隔差는 커져 왔음 .
 - 70年代 西獨企業은 東獨企業보다 投資生産性이 2.1배 높았으나 , '89년에는 6.6배가 높았음 .
 - '89年の 東獨의 1인당 GNP가 西獨의 38% 水準이었음 .
- 이러한 經濟的 隔差가 存在하는데도 市場의 힘에 의지하여 國家經濟政策을 통한 保護對策 없이 東獨의 經濟를 放置한다는 것은 經濟의 崩壞로, 해당 經濟主體의 苦痛뿐만 아니라, 國家的 負擔으로 歸着됨 .

3 . 東獨經濟의 全面 私有化의 不當性 理由

- 막대한 支出費用 때문에 個別企業이 아닌 全體國民 經濟를 짧은 時間에 완전히 私有化하여 舊西獨化 하는 것은 不可能함 .

- 戰後 西獨의 經濟를 復興시키기 위해 Marshall-Plan에서는 西獨 GDP의 1%만 投入을 해도 可能했으나, 現在 東獨經濟를 西獨水準으로 再建하기 위해서는 每年 1,100 - 1,200억 DM(舊東獨 GDP의 2/3水準)을 投入해야 하며 최소한 5年동안은 支出額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投入되어야 함.
- 이러한 費用은 결국 國民의 負擔으로 歸着되는 바, 短期間에 걸쳐 東獨의 企業을 競爭力있는 企業으로 바꾸기 위해 私有化를 優先 推進하고, 나머지 企業을 閉鎖시키는 것은 社會·經濟적으로 많은 危險負擔의 要素를 안고 있음.
- 信託廳의 급속한 企業 私有化政策도 다음과 같은 具體적인 問題點이 있음.
 - 西方投資者들에게 일시에 많은 投資對象物을 供給하게 되어, 賣却協商에서 不利한 位置에서게 되고, 그 賣却價格을 낮추게 되었음.
 - 9,000개 企業의 賣却 推定值가 '90年 여름에는 총 8,000억 - 1조억 DM이었으나, '91년에는 6,000억 DM으로 豫想되고 있음.
 - 西獨側 企業의 西獨地域 投資額 減少는 技術開發 可能性을 억제시킴.

- 東獨의 모든 企業을 私有化시키기 위해서는 舊西獨 企業들이 西獨側에 전혀 投資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3년반을 投資해야 함. (西獨企業의 西獨地域 '89년 投資總額은 1,730억 DM)
- 私有化되지 않는 企業을 閉鎖하여 既存의 일자리를 廢棄하고, 새로운 競爭力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費用이 들게 됨.
- 過去 西獨에서 1名の 일자리를 創出하는데 投資되는 費用은 25만 DM임을 考慮할 때, 200만의 일자리를 새로이 創出하기 위해서는 5,000억 DM이 所要됨.
- 急進적인 私有化 政策은 私有化 가망이 없는 企業들의 勞動者들을 不安하게 하여, 과도한 賃金引上 要求를 하게 하거나, 西獨으로 移住를 促進시켜 能力있는 人的資源(Humankapital)이 東獨地域 經濟再建에 動員되지 못하게 함.

4. 東獨經濟 私有化의 對策

- 이러한 問題點 發生을 極小化하기 위해서는 私有化를 통한 構造再編을 하되, 너무 성급하게 根本的인 體制轉換을 서두르지 말고 당장은 私有化가 곤란하지만 中·長期的으로 競爭力이 있는 기업은 國有企業(Staatsunternehmen)形態로 存續시키면서, 既存企業이 갖고 있는 技術革新의 潛在力과 人的資源을 結合시켜 企業을 再生시켜 나가는 『私企業 및 國有企業 併存의 長期戰略』을 추구해야 함.
- 質的인 면에서 舊西獨이나 西方地域에 비해 떨어져 있지만 研究技術開發 側面에서 舊東獨의 技術革新 潛在力은 世界的 水準으로 볼 만큼 상당했음.
- 東獨의 研究技術開發(F & E Ausgabe) 支出額은 總 GNP의 2.8%('89)로서, 西獨의 2.7%와 비슷했음.
- 製造業分野 總 投資額에서 研究技術開發費가 차지하는 比率도 23.6%('89)로서, 西獨의 32.3%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이태리 등 其他 EC 國家보다 2배나 많았음.
- 人口 1,000名당 研究員이 16名('89)으로 研究員 比率도 西獨과 똑같으며, 다른 EC國家보다 높았음.

— 人的資源의 質이 教育水準面에서 볼 때 결코 EC나 西獨에 뒤지지 않았음.

- 舊東獨에서는 勞動者의 62.5%가 일정한 資格을 갖춘 專門職 從事者(Facharbeiter)인 반면, 舊西獨에서는 58%였음.
- 全體勞動人口中 專門大 이상 졸업자가 舊東獨의 경우는 21.2%였던 반면 舊西獨은 18.8%였음.

5. 結 論

○ 따라서 體制의 相異點을 強調하여 過去를 無로 돌리고 새로운 制度를 確立하는 것을 目標로 經濟構造 再編을 서둘러 推進할 경우, 既存 人的資源 活用 및 蓄積된 技術開發의 可能性은 全面 廢棄되고 이에 따른 社會的 損失과 새로운 體制로 代替하는 費用만 增加하게 됨.

— 아울러 高級人力이 東獨地域을 떠나 西獨地域으로 移住함에 따라 自生力있는 經濟構造 確立은 어려워지고, 西獨側으로부터의 “自立을 위한 支援”(Hilfe fuer Selbsthilfe)도 그 效力이 喪失됨.

- 既存 人力資源중 새로운 世代의 經營人에 대한 再教育과 既存研究機關의 再編成을 통해, 社會的 費用을 줄이는 가운데 舊東獨企業의 市場經濟構造로의 編入을 촉진시켜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私有化를 통한 私企業과 國有企業(보통 西方世界에서도 一定한 部分은 國有企業임을 감안)의 暫定的인 併存이 不可避함.

資料提供 : 駐獨大使館

東·西獨間 軍隊統合에 따른 諸問題

('91.9)

I . 東部司令部

- '90.10.3 統獨과 더불어 聯邦國防省은 舊東獨人民軍의 指揮權과 兵力, 裝備 등 모든 것을 引受하기 위해 東部司令部 (Das Bundeswehrkommando Ost)를 設置하여 '91.6.30까지 9개월동안 統獨에 따른 軍事統合問題를 관장케 하였으며, '91.7.1부로 東部司令부를 解體시킨데 이어 解雇되지 않고 殘留하게 되는 兵力은 各軍 예하에 所屬시켰음.

II . 東·西獨間 軍隊統合에 따른 諸問題

1 . 人員選拔과 減縮에 따른 問題

- 舊東獨人民軍의 獨逸聯邦軍 統合에 따른 가장 큰 問題點은 人員 選拔과 減縮(解雇)에 따른 問題임.
 - 現在 統獨에 따른 國際的인 諸條約에 따라 獨逸聯邦軍은 65만 (舊東獨人民軍 包含)에서 '94년까지 37만으로 減縮하기로 되어 있음.
 - 減軍은 退職에 따른 社會福祉, 財政問題 뿐만 아니라 退職後의 社會的 適應, 새로운 職業選擇의 問題를 안고 있음.

舊東獨 人民軍中 優秀한 人力을 吸收하기 위한 人力 審査·選拔問題는 아주 短期間에 이루어졌으나, 2年동안의 試補期間(Probeit)을 設定, 일단 選別된 者들을 時限附 軍人(Soldat auf Zeit)으로 勤務케 한 뒤, 最終적으로 正式軍人 으로 採用할 計劃임.

- 舊東獨人民軍 總 9萬名중 5萬名을 일단 引受했는데 그중 15,000 - 17,000명이 將校와 下士官임
- 舊東獨人民軍의 特徵은 將校는 많은데 有能한 下士官이 不足하다는 것임.

2. 共同體 意識化의 問題

- 과거 서로를 敵으로 간주하던 分斷狀態의 意識을 克服하고 統合軍으로서의 共同體意識을 갖도록 하는 問題도 있음.

- 舊東獨人民軍中 50歲以上과 大領以上の 現役들은 모두 轉役시켰기 때문에 舊體制와 관련된 主要 權力基盤은 除去되었다고 볼 수 있음.

2,500여명의 西獨軍 將校들이 東獨地域에 派遣되어 舊東獨人民軍을 큰 問題없이 指揮하고 있으나, 勤務環境, 報酬, 生活方式 등에서 差異가 常存하고 있어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님.

- 殘留 舊東獨人民軍들중 5천명의 將校와 3천명의 下士官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體制下의 民主軍隊에 적응하도록 2주에 걸친 教育課程을 이미 履修케 하였음 .

3. 東·西 俸給體系 相異에 따른 問題

- 그러나 俸給體系가 다르고, 舊東獨地域의 勤務環境이 劣惡하여 東·西獨軍間에 갈등이 存在함 .
- 軍人도 公職者와 마찬가지로 西獨水準의 60%에 해당하는 俸給(점차 生産性的의 向上에 따라 隔差를 줄여갈 計劃이지만)을 받고 있는 바, 職業軍人이 아닌 義務兵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隔差를 解消할 方針임 .
- 최근('91.1 - 5) 東部司令部에 接受된 1,600件的 訴願請求(Eingabe)중 700件이 俸給 差別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80件이 人間的인 差別待遇를 호소하고 있음 .
- 國防省이 算定한 바에 따르면 東·西獨 軍施設(특히 內務班, 衛生施設, 炊事場)의 隔差를 줄이는데 最小한 160억 DM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했는데, 現在 統獨以後 豫算中 國防費가 縮小되고 있기 때문에 隔差 解消에는 상당한 時日이 所要될 것 같음 .

4. 東獨裝備 廢棄에 따른 問題

- 統獨과 함께 獨逸聯邦軍에 引受된 裝備와 탄약들은 減縮 廢棄될 豫定인데, 이에 相當한 費用이 所要될 것임.

CFE 協定에 의거 戰車·戰鬪機, 大砲, 艦艇, 미사일 등 5大 武器體系에 대해서 NATO 16個國이 각자 얼마만큼의 武器를 줄일 것인가가 決定되었는 바, 舊東獨人民軍의 裝備는 MIG-29기 (性能檢査에서 優秀한 비행기로 評價, 東獨人民軍이 相當한 附屬品 在庫量을 갖고 있어 10-15년 使用 決定)만을 除外한 거의 모든 裝備를 廢棄 또는 販賣할 計劃임.

裝備(彈藥 包含) 處理時 第3國에의 販賣問題는 現存 條約上 明示된 制限規定은 없으나, 가능한 限 NATO 會員國에 販賣할 豫定이며, 聯邦 安保理事會에서 每件別로 可否를 決定할 豫定임.

- 舊東獨人民軍이 保有하고 있던 彈藥 30만톤의 處理가 가장 많은 費用과 期間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되는데, 彈藥 廢棄에 10-15년이 所要될 것으로 專門家들은 推定하고 있으며, 그 費用은 算定조차 못하고 있음.

- 탱크 1대를 廢棄하는데 平均 10만 DM의 費用이 들며, 약 2800대를 廢棄해야 하므로 그 費用만 2억 8천만 DM에 이를 것으로 推定됨.

5. 東獨駐屯 蘇聯軍 撤收에 따른 問題

- 舊東獨駐屯 蘇聯軍은 '94年末까지 漸進적으로 撤收할 計劃임.

- 統獨當時 蘇聯人은 軍人 34萬名과 民間人 21만 등 총 55만명이었으며, 蘇聯軍이 占領하고 있던 兵營·訓練場 등의 不動產 價値는 1000억 DM으로 推定되고 있음.
- '94까지 매년 4-5個 師團이 撤收할 計劃이며, 약 4000基에 달하는 各種 武器도 이에 包舍되어 있음.
- 殘留 蘇聯軍의 脫營問題가 深刻하게 提起되고 있는 바, 蘇聯軍隊의 紀綱解弛와 獨逸의 經濟·社會的 매력 때문에 歸鄉을 拒否하고 현재도 250명의 蘇聯軍이 政治的 亡命을 要請하고 있음.

Ⅲ . 東獨軍 所有 軍事機密 引受

- 統獨과 더불어 東獨人民軍이 保有하고 있던 軍事機密 書類 2만 6천건이 獨逸聯邦軍에 의해 引受되었는데 多數의 바르샤바條約機構 軍事活動에 관한 書類가 包涵되어 있음 .

上記 資料中 '89 가을 東獨에서 대규모 示威가 일어났을 때 東獨 軍人들에게 國民들을 향해 銃器를 使用하라는 指示命令 書類는 發見되지 않았음 .

- o 과거 Stasi가 작성.보관하고 있던 각 개인에 대한 정보기록문서를 포함한 구동독 국가보위부 (Mfs) 소유 문서취급규정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이 금년도 말까지, 빠르면 금년 여름휴가가 이전에 독일 연방하원을 통과예정으로 연방내무성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중임.
 - 과거 Stasi는 구동독 억압체제의 상징이었기에, 수백만에 달하는 동.서독 주민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탐보고서가 공개되고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과거 전력이 밝혀짐에 따라 법치국가적 질서가 확립이 안된 동독지역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마치 판도라는 상자와도 같은 이문서의 취급과 처리에 신중을 기해왔음.
 - 연방정부는 통합조약에 따라 Stasi문서 취급에 관한 연방정부 특별전권 위임자인 Gauck으로 하여금 '901.12.18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을 만들어 관련문서의 처리.이용.보관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관련사항 통독관련 자료로 기보고 : 분류번호 100-66)
 - 구동독 국가보위부 소장서류와 자료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안 (Gesetz ueber die Sanierung und Nutzung der Unterlagen und Daten des Mfs : 약칭 Stasi 문서법)의 초안은 각 정당 원내교섭 단체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과거청산문제와 관련 피해자측에 속한 민권운동단체 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연방내무성 주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 그러나 과거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PDS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기로 함.
- o 법률토론과정을 거의 주도하게 될 내무성의 준비초안 내용에 의하면 자료수집, 자료해명, 자료관리, 자료사용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의거하고 있음.

- 개인으로 하여금 그의 인권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것.
 -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에 관해 기술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것.
 - Mfs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평가를 촉진시킬것.
 - 법집행기관이나 기타 관계부처에 형사소추 등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복권, 사회 지도급인사 임명시 과거 권력 심사자료 등 특정목적으로 이용될 것.
- o Stasi 문서첩(Akten)을 나란히 병열하면 장장 200 km나 되는데 현재 80 km 정도가 아직도 문서내용이 무엇인지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을 정도로 조사가 안되고 있음.
- 이의 관리를 위해 독일연방 전담위원이 위촉될 계획인 바 정부로부터 임명될 것인지 하원으로부터 선출될지는 아직 미정임.
 - 또한 의원, 각주대표, 학자들로 구성될 자문위원회 구성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 최고기관이 연방전담위원에게 Stasi 문서 취급에 관해 자문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의 특별전권위임자인 Ganck도 연방정부에서 추천된 5명의 자문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
 - Stasi 문서 연방전담위원은 여타한 공공기관이나 비공공기관일지라도 Stasi 서류철을 제출하도록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인데 Stasi 문서는 Berlin의 중앙보관소와 신설 5개주의 주정부 보관소에 보관되도록 함.
- o 연방내무성은 합법적인 이용권자의 범위를 해당관계인, 비호자, 근무요원, 제3자와 같은 4대 집단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해당관계인"이라 함은 MfS에 의해 인적사항이 수집되었던 자인바 근무요원이나 비호자는 아니었던 자를 말하며

- "비호자"는 Stasi로부터 보호를 받았거나 지원을 받은자인바 근무요원은 아니었던 자이며
 - "근무요원"은 MfS에서 주업으로 근무했던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비공식 요원으로서 인적사항과 관련되는 자료를 공급한 자이며
 - "제3자"는 서류철에 거론되어 있으나 "해당관계인"이 아닌 "모든 기타인"을 뜻한다고 함.
- o 이제까지의 Stasi 문서 임시이용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Stasi의 모든 문서는 열람이 허용이 안되나, 복권 및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존하는 위해행위"에 대한 방어를 위해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원, 판.검사, 공무원 등의 신규채용시 과거 전력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Stasi 문서 전권위임자 Gauck이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새로운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관계인"은 그에 관한 서류철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관계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를 복사하여 발행도 가능하며 이와 같은 권한은 실종되었거나 사망한자의 가족에게도 있음.
 - 광범위한 정보 취득권(Auskunftsrecht) 및 정보 열람권(Einsichtsrecht)은 근무원에게도 적용되나 근무원이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을것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음.
 - 비호자에게는 정보 열람권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합법적 과심사항"이 입증될때 자신에 관한 저장자료에 관한 정보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제3자 역시 서류철을 열람할수는 있으나 타인의 이름과 기재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되며 서류철상의 다른 관계인이나 제 3자에 관한 자료가 관계인에게 복사되어 발행된 것 역시 발설되어서는 안됨.
- o 국가정보기관이 Stasi 문서에 손을 댈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기관이 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장기간 토론의 대상이 될 것임.

- 내무성 초안에 따름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서류는 정보보호 측면에서 정보기관에게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문서(과거 Stasi의 테러조직과의 연계문서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토록 하고 있음.
- 야당과 자민당은 헌법보호청 등 정보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Stasi 문서의 열람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첨부할 것으로 예상됨.

I . 前東獨 秘密情報部 局長 裁判과 關聯한 聯邦大法院 決定

1. 決定內容

- o 聯邦大法院 (Bundesgerichtshof)은 '91.8.6 現在 Muenchen에서 進行中인 前東獨 秘密情報部 局長 Schuett裁判과 關聯하여, 現在 蘇聯에 避身中인 前東獨 秘密情報部 總責 ('87까지)인 Markus Wolf 를 證人으로 召喚키로 決定함 .
 - '89부터 Wolf에게는 拘束令狀이 發付되어 있는 데 聯邦法務省과 聯邦大法院은 Wolf가 獨逸에 入國하더라도 令狀을 執行하지 않고 刑事訴訟法 295條에 의한 “ 刑事未決法の 治外法權的 保護 ” (Sicheres Geleit)規定을 適用하여, 1주일 동안 獨逸에 머무른후 蘇聯으로 돌아가는 것을 保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 聯邦大法院은 過去 스파이 活動을 昭詳하게 證言해줄 總責任者가 蘇聯으로 避身해 있는 狀況에서 Wolf의 拘束이라는 法的 利益과, 現在 各州法院에서 進行中인 過去 東獨 스파이들에 대한 個別裁判의 圓滑한 進行이라는 法的 利益 사이에서 고심한 結果 일단 後者를 택하기로 決定한 것임 .

2. 決定背景

○ 이러한 決定은 舊東獨 스파이 處罰이라는 同一한 刑事事件에 대해 個別 州法院의 判決과 聯邦大法院의 解釋이 각각 달라, 舊體制 清算問題中 爭點으로 떠오르고 있는 舊東獨 스파이 處罰問題에 대한 聯邦憲法裁判所의 最終 判決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91. 7. 30 베를린 州法院(Kammergericht Berlin)은 起訴된 舊東獨 스파이總責(Wolf후임)이었던 Werner Grossmann과 그 側近 4名에 대한 裁判에서 이들에 대한 處罰은 憲法에 違背된다고 判示하고 憲法裁判所에 이에 대한 最終 決定을 委任했음.

· 베를린 州法院 判事들의 見解에 의하면 過去 東獨에서 活動한 西獨側의 스파이들은 刑事處罰되지 않고, 西獨側에서 活動한 東獨의 스파이들만 處罰한다는 것은 基本法(憲法)3條의 平等原則에 違背된다고 보고, 過去 東獨의 秘密諜報要員들의 活動은 西獨의 秘密諜報要員들의 活動과 결코 다를 바 없었다고 判示함.

- 이러한 決定과 關聯하여, '91. 5 聯邦大法院 (Bundesgerichtshof)은 Muenchen法院에서 進行中인 Schuett에 대한 同一한 性質의 刑事事件임에도 이와 反對되게 處罰해야 한다는 相衝된 決定을 내린 바 있음.

II. 舊東獨 스파이 處罰과 關聯한 相反된 立場

1. 處罰主張 立場

- o 베를린 州法院의 決定과 聯邦大法院 決定의 相衝 問題는 最終적으로 聯邦憲法裁判所가 法的인 立場을 確定하겠지만, 現在 5,000名으로 推定(聯邦大檢察總長 Stahl)되는 過去 東獨스파이들의 去就 問題는, 批判이 擡頭되고 있는 過去清算 不撤去 問題와 關聯 論難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聯邦法務省과 聯邦大檢 등 이들 處罰을 主張하는 側은 過去 東獨스파이들은 舊東獨共產黨 政權의 下手人들로서 秘密諜報活動을 通해 反法治國家的인 體制를 守護하려 했으므로, 베를린 州法院이 主張하듯, 이들에 대한 處罰이 基本法에 결코 違背되는 것은 아니라고 主張함.

- 形式的으로는 같은 스파이活動이었지만 統一된 獨逸聯邦共和國이 過去 西獨의 正體性 (Identitaet)을 그대로 承繼하고 있는 點을 勘案하여
- 西獨의 스파이들은 西獨政府의 庇護하에 이러한 活動을 한 반면, 東獨의 스파이들은 당시 西獨에 대해 西獨의 內的·外的인 安保를 해할 目的으로 具體的인 危害行爲를 저질렀으며,
- 오늘날까지도 正確히 證據가 確保된 것은 아니지만 過去 많은 스파이들이 당시 西獨과 西유럽에 대한 秘密情報과 情報員들을 이전 東歐圈 國家 (Ost Block)에 넘김으로써 國益을 損傷시켰으므로 당연히 이들은 處罰해야 한다고 主張함.
- 또한 最近 밝혀진 過去 東獨人民軍의 秘密文書 (聯邦獨逸軍 保管)에 의하면 東獨軍 作戰이 攻擊的으로 遂行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過去 西獨體制 安保危害行爲에 대해 過去 東獨의 스파이들이 커다란 寄與를 한 만큼, “攻擊的인” (offensiv) 東獨스파이 活動과, “防禦的인” (defensiv) 西獨스파이 (BND) 活動은 區分되어야 한다고 主張함.

2. 處罰反對 立場

○ 반면 이들에 대한 辯護士와 베를린 州法院의 決定을 擁護하는 사람들은 刑法을 통해 결코 “ 좋은” (gute) 西獨스파이, “ 나쁜” (boese) 東獨스파이 식으로 區分하여 處罰할 수는 없다고 主張하며, 東獨의 스파이들은 法庭에 세우고, 西獨의 스파이들은 “ 統一祖國” 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 勝者の 편에 서는 司法府” (Sieger-justiz)라는 非難을 면키 어렵다고 主張함.

— 스파이 活動은 雙方國家間 活動으로 오래전부터 通用되던 慣行이었으며, '72 東·西獨 基本條約以後부터는 東獨의 國家성이 廣範圍하게 國際的으로 認定되었음을 勘案하면, 統獨이란 特殊한 狀況이지만 過去 東獨의 法에 의하면 이들이 결코 處罰될 수 없었으므로, 過去行爲에 대해 西獨法을 適用 이를 遡及해서 處罰하는 것은 基本法 3條의 平等權 條項에 어긋난다고 主張함. (美大統領 Bush도 過去 CIA局長이었고, 現獨逸法務長官 Kinkel도 過去 西獨情報部 部長이었음을 想起시키며 서로 立場이 달라졌을 때를 假定해 보면 處罰主張은 勝者の 論理라고 反駁함.)

- 또한 國際法的으로 널리 通用되고 있는 1907년에 制定된 國家間 戰爭에 관한 헤이그 條約(Haager Landkriegeordnung) 31條에 의하면, “ 戰爭中 스파이活動을 하다가 붙잡힌 경우 敵國에 의해 戰爭捕虜로 看做되므로 一般刑事處罰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辯護人側의 論旨임.

II . 本件에 관한 輿論

- o 그러나 東獨의 政權이 무너졌고, 그것도 自體 住民들의 共產政權에 대한 抵抗을 통해 國家가 崩壞되고 西獨의 法的인 秩序에 一方的으로 編入이 된 만큼, 過去 東獨이 反法治國家的 秩序下的 國家(Unrechtstaat)라고 規定지을 수 있는 充分的 理由는 있으며, 이에 따라 法治國家와 反法治國家를 위해 행한 스파이活動도 區分되어 處罰되어야 한다는 것이 東獨 대다수 住民들의 過去 Stasi 등 共產獨裁 蠻行도 經驗했고 철저한 過去 清算을 바라는 情緒에 가깝다고 보여짐.

— 특히 過去 東獨住民에 대한 政治的인 彈壓機構의 代名詞처럼 되어 있는 Stasi 機構內에 所屬되었던 秘密情報部 要員들의 活動에 대해서, 法的인 側面에서의 適用 및 解釋上의 問題와 관계없이 過去 被害者를 포함한 대다수 東獨住民들이 “ 똑같은 일을 한 ” (arbeiten Hand in Hand) 사람들로 取扱하고 있는 만큼, 政治的인 側面에서 보면 處罰은 不可避한 것 같음 .

· 統獨前 統合條約 協商時 이들 스파이에 대한 赦免考慮 規定 插入與否가 論難이 되다가, 輿論의 反撥에 부딪혀 撤回되고 處罰하기로 方針을 定했었음 .

— 一般國民들은 納得할 수 없는 方法으로 蘇聯으로부터 1주일동안 獨逸을 訪問하게 되는 前 東獨 스파이 總責 Wolf는 過去 自己部下들을 積極的으로 辯護하며 過去 스파이行爲의 “ 雙罰性 ” 을 強調하겠지만, 現 獨逸內 司法府의 多數說은 反法治國家를 守護하기 위한 “ 合法的인 不法行爲 ” (gesetzliches Unrecht)에 대해서는 어떤 形式으로든지 現 法治國家 秩序下에서 處罰되어야 한다는 立場임 .

· 따라서 많은 法學者들은 일단 刑事處罰은 하되, 刑을 半減시키는 赦免(Amnestie)의 方法도 考慮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

I . 基本法에 따른 判事의 地位

- 西獨은 1945年以後 나치스政權에 의해 폐지되었던 法官 獨立性의 復活을 통해 法治主義國家의 基本原則인 三權分立의 原則을 確立하였는 바, 基本法 제9장에 이에 해당하는 廣範한 內容을 規定하고 있다.
 - 이와 같은 背景下에 法官職을 遂行하는 자는 專門知識은 물론 人格的인 面에서 特別要件을 갖추고 責任感이 있어야 한다는 結論이 導出된다.
 - 따라서 法官은 精通한 專門知識을 갖고 있는 엘리트로서 人格이 高邁해야 하며, 合法性을 쟁취하려는 市民의 마지막 保護者라는 使命感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며, 體制에 順應하는 機會主義者여서는 안된다.
- 이에 반해 東獨政權은 司法權의 獨立을 無視했는 바, 法官들은 體制에 예속된 指導層으로서 SED라는 國家政黨의 一般路線을 偏頗的으로 盲從하였고, 黨의 “階級認識 觀點”에 尤리하게 法律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西獨의 法律秩序 및 法律認識과는 正反對되는 것이었다.

II . SED의 統治機構로서의 社會主義的 法律行政

- Lenin은 市民社會的 法院機構를 破壞하고 새로운 社會主義的 法院으로 代替하는 것이 “ 프롤레타리아革命의 絕對的 義務” 라고 표현하였다.
- 그에 부응하여 東獨에서는 法治主義國家에 대한 思想은 물론 自由民主主義國家의 相互 牽制 및 均衡을 維持시키는 裝置로서 獨自적이고 不偏不黨한 立法·行政·司法의 三權分立의 原則이 廢止되었다.
- 結果的으로 東獨의 司法府는 마르크스 레닌主義 幹部政黨인 SED의 主導權下에 있었으며, 司法府가 행위를 하기 위해 絕對的으로 필요한 基本原則은 SED가 決定하며, 司法府內의 黨組織은, 法律行政機關이 黨의 決定事項을 法律行政에서도 實現할 수 있게 되도록 監督을 했다.
- 그리하여 法治主義國家라는 本質에 根本的으로 門外漢인 指導層이 大法院은 물론 法務部에서조차 法律行政을 遂行했던 바, 이들 SED 追從者들에 의해 決定된 原則들이 모든 法院에게 “ 가장 效率的인 指針이요 法律規範의 올바른 政治的 適用” 으로서 公布되었다.

Ⅲ. 東獨의 法律行政에 있어서의 SED의 幹部充員政策

- 國家機關을 비롯하여 法律行政에 있어서의 SED 政策의 核心은 幹部充員政策이었다.
“(黨)幹部가 모든 것을 決定한다” 라고 스탈린은 누누히 力說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리되었다.

Stalin에 따르면, 幹部는 우선 勞動者階級の 政策을 파악해야 하며, 이와 같은 政策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正確하게 實現할 能力과 態勢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幹部業務는 組織的, 技術的 手段의 適用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黨의 主導權 確保를 위한 政策的·組織的 手段이었다.

- 法院分野 幹部政策의 組織은 東獨 法務部가 관할하였으며, 檢事는 東獨의 大檢察廳이 관할하였다. 判事나 檢事の 採用은 물론 法律學 專攻 大學生 選拔을 위한 엄격한 計劃이 確立되어 있었다.

法務部가 幹部業務 遂行上 充足해야 할 階級的 任務는 司法幹部의 65%가 勞動者階級 出身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法學志望 大學生으로 하여금 大學에 入學하려면 大學卒業前에 市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女性分布 역시 幹部政策의 特徵이었다. 地區法院 및 郡法院의 女性分布는 55%였으며, 幹部級의 女性分布는 약 30%나 되었다. 많은 女判事와 女檢事들이 妊産婦 保護施策으로 缺勤이 잦아지자 女性人力 增員을 위해 法科大學生 選拔時 男女比率이 3:1에서 後에 2:1로 변경되었다.

IV. 東獨에 있어서 法曹人의 教育

- 東獨의 判事와 檢事 教育과 관련하여 大學의 法律學은 소위 社會主義的 單一教育體制와 직접 關聯이 있었다. 1968年度 社會主義 教育改革과 함께 大學의 法律學 研究는 社會主義的 法曹人을 養成할 任務가 부여된 뒤 勞動者階級の 階級的 觀點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 政權의 幹部政策의 對象이 되도록 하였다. 法曹人의 “階級的 教育의 目標”는 判事, 檢事, 國家公證人에 있어서 특히 다음과 같은 特性이 教育을 통해 習得되도록 指示하고 있다. (當時 法務部長官 Kurt Wuensche)

- 獨逸民主主義共和國에 대한 忠誠과 勞動者·農民 權力의 완벽한 強化를 위해 모든 能力과 全力을 動員할 것.
-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확고한 社會主義 原則 遵守 및 政治的 信賴性 維持

社會主義 建設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現象에
대하여 非妥協的 姿勢 堅持

勤勞者와 긴밀한 관계 維持, 그들의 經驗을 이용
하여 社會主義的 集團主義의 促進 및 開發

社會主義的 10大 道德律에 立脚하여 社會生活과
政治活動에 있어서 뚜렷한 個性과 模範的 行動

- 大學教育은 基礎專攻과 專門專攻으로 分類되었으며,
4年間의 專攻後 Diplom 學位가 수여되었다.
70년초 이래 東獨의 法律行政의 專攻內容은 다음과
같다.

基礎專攻

- 마르크스 레닌主義 哲學
-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政治經濟學, 東獨
社會主義의 經濟制度
- 獨逸 勞動運動史, 現代 勞動者階級の 歷史的
任務와 黨의 主導的 役割

專門專攻

- 刑法 및 刑事訴訟法
 - 民法 및 民事訴訟法
 - 家族法
 - 勞動法
 - 農業生產組合(LPG)法
 - 土地 및 公證人法
- 및 其他科目에 관한 基礎知識

- 이와 같은 大學教育의 內容과 水準은 西獨의 法律學 專攻教育과는 全然 比較할 수 없는 것이었다. 決定的인 差異點은 專攻內容에서 뿐만 아니라 法律學的인 研究水準이나, 學術書籍의 出版量, 그리고 시험의 수준에 있었다. 司法官 試補에 비교될 만한 實務訓練과 卒業試驗인 第2次 考試와 같은 것이 東獨에는 없었다. 단지 지난 數年間 判事나 檢事로서 거쳐야 할 1년간의 實習期間이 고작이었다.

V. 統合條約上의 判事와 檢事に 관한 審査節次

1. 統合條約上의 審査節次

- 東獨 法曹人들은 全然 다른 法律文化속에 있었으며, SED의 道具化를 면치 못했는 바, 黨派的인 判決을 통한 容疑者와 被告人에 대한 裁判節次上의 權利 剝奪 등으로 被害를 입은 東獨住民들은 쉽게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民主主義的 法治主義國家에서는 基本法上의 法治國家的 基本價値를 守護할 수 있는 사람만이 判事나 檢事로서 계속 勤務할 수 있기 때문에 統合條約은 法官으로 계속 勤務할 수 있는 東獨法曹人에 대해 法官選拔委員會를 통한 審査節次를 規定하고 있다.

東獨判事 中 審査後 選拔된 者는 우선 新設 5個州에서 試補判事 또는 時限附判事로서 勤務하게 되며, 최소 3年, 最長 5年間의 勤務以後 終身判事로서 任命될 수 있다.

- 統合條約에 따르면 判事選拔委員會 活動 및 檢事 再任用 審査를 1991년 4월 15일까지 完了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期限 遵守는 審査가 실제 進行되면서 實現不可能한 것으로 立證되었다. 왜냐하면 審査받아야 할 判·檢事들이 審査委員會 委員으로 選出되었었기 때문이다.

2. 各州의 法曹人 審査 實態

- 1990년 2월 Modrow 政府는 東獨政權의 判事와 檢事에게 政治的 부담이 될만한 經歷을 제거하고, 그들의 幹部書類를 좋게 고칠 수 있도록 措置하였는데, 이것이 또 다른 問題點으로 登場하였다. 判事와 檢事에게 송부된 幹部書類中 일부는 履歷書 마저 없어져 버렸으며, 대다수의 書類는 1990年以後의 經歷만 記錄되어 있었다.
- 또한 聯邦 構造로 인하여 新設 5個 各州는 判事 選拔과 檢事任用을 위한 自體 檢討基準 設定時 相異한 基準을 設定하여 問題點이 發生하였다.

公開輿論에서 各州間의 合意點 摸索이 强요되었지만, 오늘날까지 達成되지 못하고 있다.

“出身地域 恩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한 州에서 시험에 合格한 자가 다른 州에서는 엄격한 要求條件 때문에 不合格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 反對現象도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3. 작센州의 判事 選拔 및 檢事 任用基準

- 檢討가 가장 빠르게 進척되고 있는 Sachsen州의 判事 選拔 및 檢事任用委員會 委員長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問項에 기준하고 있다.
 - 申請者가 과거의 經歷에 비추어 市民들로부터 法治主義國家的 司法府 代表로서 信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
 - 申請者가 任用될 경우, 獨逸聯邦共和國의 價値體系와 法律秩序로부터 導出되는 精神과 法律條文에 忠誠할 것인지 여부
- 各 志望者들로부터 上記와 같은 주된 質問에 대한 答辯이 個別的으로 聽取되며, 特定 判斷基準에 의한 複合問項은 設定되지 않았다.

- 各 州 政府의 이와 같은 多樣性으로 인하여 審査 結果가 어떻게 나올지 事前豫測을 전연 할 수 없는 형편이다 .

申請書가 600건이나 接受된 Sachsen州가 가장 빨리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 즉 Sachsen州에서는 檢討者의 1/3이 不適格者로 判明되어 있으며 , 2/3는 계속 任用의 肯定的 判斷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7월말 처음으로 完了된 追後 選拔結果는 50%에 이르고 있음) 東獨法官中 90%가 심사에서 不合格할 것이라는 90年末 91年初에 행한 聯邦 法務部의 國務次官의 發言을 고려한다면 (舊東獨 出身法官으로 구성된) 選拔委員會가 당시에 예상 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하지 않게 처리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

- 이와 같은 추세는 新設 5個州에 대하여 과거 SED 政權下에서 그 시녀와 다름없던 法曹人들에 의해 대부분의 判決이 또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

이것은 곧 Sachsen州의 Heitmann 法務長官이 말한 것 처럼 “ 평화스럽게 進行된 革命의 裏面 ” 이라고 하겠다 .

- 나치스體制가 崩壞된 以後와 比較해 보면 1945年 직후 나치스 黨員이었던 判事와 檢事는 모두 公職 으로부터 파면되었다가 일단 脫나치스化가 遂行된 이후 다시금 判事나 檢事로 採用되었다. 이에 대해 西獨의 各界 各層은 西獨司法府에 대해 맹렬 한 비난을 했으나, SED政權이 崩壞된 오늘날, 당시의 실정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批判을 했던 者들이 沈默을 固守하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나치스가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이 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이 이와 같은 問題點을 “ 나치스法官의 컴백” 에 반대했던 것과는 무엇인 가 다르다고 認識했기 때문인가?

이와 같은 나치스法官의 복귀는 基本法上의 司法 體系 確立을 위한 적지않은 擔保였으며, 이제 우리 는 그와 같은 擔保와 또 다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나치스와 비슷한 方法으로 SED시스템도 1989년에 敗亡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치스體制가 根本的으 로 否定되었기 때문에 脫나치化 以後 再任用된 判事 와 檢事中 비록 나치스黨員이었던 者들도 民主的 法 治主義國家의 改善에 忠誠을 다 했다. 그러나 SED는 비록 後繼政黨形式이지만 금지되지 않은 채 아직까지 살아있다.

- PDS라 改名한 후 거대한 財産을 계속 維持하면서 聯邦政府가 政黨과 議員에게 보장하는 特惠를 누리고 있다. 再任用되는 判事나 檢事는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基本法이 提示하는 外觀上의 法官 職責에 맞는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를 內的으로 確信化 해야 한다. 이와 같은 過去의 清算과 未來에 대한 方向設定에는 政治教育의 役割이 중요하다.
- 또한 專門性的의 提高에 있어서도 할일이 많이 있다. 舊東獨地域 出身 判事들이라 할지라도 3流 判事로 보아서는 안될 사람도 있기는 하나 統合條約 規定은 專門的인 職能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幻想을 現實로 만드는 것이 將來의 任務이다.

東獨의 法律體系와 西獨의 法律文化間의 差異가 얼마나 컸었던가를 考慮할 때, 新設 5個州에 있어서 法治國家的인 司法體系 確立은 아직도 많은 時間을 要하고 있다.

資料提供 : 駐獨大使館

1. 舊東獨 共產黨의 靑少年政策

가. 靑少年政策 目標

○ 舊東獨 共產黨(SED)의 靑少年政策(Jugendpolitik)은 社會主義를 帝國主義로부터 保護하고 持續的으로 強化·發展시키기 위해 階級鬪爭意識으로 武裝된 社會主義的 人間을 養成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음.

— 靑少年法(Jugendgesetz)이 存在하기는 하나, 靑少年의 任務와 그에 따른 教育 등 靑少年 政策은 共產黨에 의해 決定되고 領導됨.

— 共產黨의 重要的 大衆外廓團體로써 “自由獨逸靑年團”(Freie Deutsche Jugend:FDJ)은 이러한 黨의 靑少年政策을 傳播하는 道具로서 東獨體制 維持에 重要的 役割을 擔當하였음.

나. 自由獨逸靑年團(FDJ)의 性格

○ FDJ는 '46. 3. 7 蘇聯占領下에서 호네커에 의해 創設되었으며, 어린이 組織인 “Pionierorganisation Ernst Thaelmann” 까지 指導하는 共產主義 政治教育團體였음.

- PDS라 改名한 후 거대한 財産을 계속 維持하면서 聯邦政府가 政黨과 議員에게 보장하는 特惠를 누리고 있다. 再任用되는 判事나 檢事は 스스로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基本法이 提示하는 外觀上의 法官 職責에 맞는 自由民主主義的 基本秩序를 內的으로 確信化 해야 한다. 이와 같은 過去의 清算과 未來에 대한 方向設定에는 政治教育의 役割이 중요하다.
- 또한 專門性的의 提高에 있어서도 할일이 많이 있다. 舊東獨地域 出身 判事들이라 할지라도 3流 判事로 보아서는 안될 사람도 있기는 하나 統合條約 規定은 專門的인 職能이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幻想을 現實로 만드는 것이 將來의 任務이다.

東獨의 法律體系와 西獨의 法律文化間의 差異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考慮할 때, 新設 5個州에 있어서 法治國家的인 司法體系 確立은 아직도 많은 時間을 要하고 있다.

資料提供 : 駐獨大使館

1. 舊東獨 共產黨의 青少年政策

가. 青少年政策 目標

○ 舊東獨 共產黨(SED)의 青少年政策(Jugendpolitik)은 社會主義를 帝國主義로부터 保護하고 持續적으로 強化·發展시키기 위해 階級鬭爭意識으로 武裝된 社會主義的 人間을 養成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음.

— 青少年法(Jugendgesetz)이 存在하기는 하나, 青少年의 任務와 그에 따른 教育 등 青少年政策은 共產黨에 의해 決定되고 領導됨.

— 共產黨의 重要한 大衆外廓團體로써 “自由獨逸青年團”(Freie Deutsche Jugend:FDJ)은 이러한 黨의 青少年政策을 傳播하는 道具로서 東獨體制 維持에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였음.

나. 自由獨逸青年團(FDJ)의 性格

○ FDJ는 '46. 3. 7 蘇聯占領下에서 호네커에 의해 創設되었으며, 어린이 組織인 “Pionierorganisation Ernst Thaelmann” 까지 指導하는 共產主義 政治教育團體였음.

- 定款에 의하면 自發的으로 加入토록 되어 있으나, 거의 14세 이상(加入 最小年齡)의 中·高等學生, 大學生, 職業學校 및 勞動者들이 總網 羅되어 있었으며,
- 加入年齡 上限線은 24歲이나, 실제 幹部 등 5% 程度가 24歲 以上이었음.(統獨直前 會員數는 230萬 程度)

다. 自由獨逸青年團 (FDJ)의 主要機能

- o SED 黨員 後繼者 養成
- o ML主義 傳播를 통한 社會主義 意識化 教育
- o 學校·職業·軍事教育의 補充教育
- o 休暇 및 餘暇善用時 社會主義的 文化 및 藝術活動 獎勵
- o 다른 教育機關 및 家庭에서 教育의 先導

2. 舊東獨共產黨의 青少年政策의 效果

- o 青少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社會主義 意識化 教育은 70년대초까지 相當히 成果가 있었으나, 兩獨關係가 正常化되어 東·西獨間 人的交流가 시작된 뒤로는 教育의 說得力이 弱化되기 시작했음.

- 專門家들에 의하면 보통 注入式 教育은 14歲 以前까지 效果가 있으며, 그 以後부터는 “ 內的인 確信” (innere Ueberzeugung)이 없으면 教育의 效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DJ 所屬 東獨의 靑少年들도 西歐로부터 影響 (록음악 또는 東·西間 和解무드)때문에 SED의 靑少年 政策은 難關에 逢着함.
- SED (獨逸統一社會黨)側은 이러한 靑少年 教育의 問題點을 認識하자 義務的인 兵營集體訓練, 資本主義 및 西獨의 政治制度에 대한 敵對的이고 否定的인 意識 注入, 反社會主義的인 人文·社會科學 書籍에 대한 接近 封鎖 등을 通해 스스로의 確信에 의해서가 아닌 “ 適應을 強要” 함으로써 靑少年들로부터 創造性과 客觀的인 思考能力을 抹殺 하였음.

3. 舊東獨 共產黨의 靑少年政策에 대한 評價

- o 이러한 理念教育의 東獨體制 維持에 얼마만한 成果가 있었고, 統獨後 東·西獨間 異質性 克服이라는 側面에서 어떤 影響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는 아직 活潑하지 못함.

- '89 - '90年 東獨의 大變革期에 東獨을 脫出한 사람 중 약 46%가 25歲 未滿이었던 點을 勘案하면, 過去 教育의 成果가 疑問視 되기도 함.
- 그러나 '89 東獨에서 平和革命의 主役들이 大學生이 아니었고 주로 젊은 勞動者들이었던 點(勿論 反體制 知識人 包含)을 勘案하면, 未來의 特權階層으로서 體制順應的인 人間을 養成하는데 相當한 寄與를 했다는 主張도 있음.
 - 大學生의 대부분이 獎學金과 寄宿舍를 提供받았으며, 未來의 安定된 職場(물론 SED 黨員 資格포함)까지 保障받을 수 있었으므로, 統獨으로 가장 많은 것을 잃게된 階層이었음.
 - 統獨以後 SED의 後身인 PDS의 主要한 支持階層이 過去 東獨大學生이라는 事實 또한 이를 뒷받침함.
- 한편 高等學生 또는 職業學校 出身의 靑少年層은 價値體系의 混亂을 거둬하며, 民主的이고 多元的인 社會에 適應하지 못하고, 政治的인 極端化 現象(新나찌화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自律性과 自己責任性에 基礎한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는데 相當한 時日이 所要될 것으로 보임.

東·西獨間 放送協力에 관한 合意書

('91.9)

제 1 조

1.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상대방의 TV프로그램을 매입한다. 상호매입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의 TV프로그램을 포괄하나, 특히 TV 드라마, TV영화, 연극, 음악프로, 오락프로, 기록물, 스포츠프로, 청소년프로, 문화교양프로 등이 그 대상이 된다.
2. 당사자 쌍방은 자신들의 TV프로그램에 관한 판매제의서, 카타로그 및 기타 적당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대표들을 위해 1년에 1회 또는 2회 프로그램 시사회를 개최한다. 계약당사자 일방의 희망에 따라 특별 시사회도 개최된다. 프로그램 매입조건은 매번 상호합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3. 계약상대방 쌍방에 의해서 장소, 내용,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매입되지 않는 한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자료판매시 프로그램을 교부하는 계약당사자는 프로그램을 수령하는 계약당사자에게 현존하는 저작권상의 의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밖에는 성립된 프로그램 구매계약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저작권상의 약정이 적용된다.
4. 계약당사자 쌍방은 체결된 프로그램 계약의 범위내에서 아울러 해당저작권법상의 약정을 고려하여 매입한 프로그램을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즉, 계약당사자 쌍방은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수령한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계약당사자 쌍방은 방영일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해서 상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 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양국간의 법률규정과 이에 상응하는 가능성과 권한을 참작하여 상주특파원, 일시방문 특파원, 펜기자, 카메라팀을 지원한다.

제 3 조

유로비전(Eurovision)과 인터비전(Intervision)간에 기존의 관행과 합의에 의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용부담없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한, 계약당사자 쌍방은 정치, 문화, 스포츠사건의 취재에 있어서 합의된 사례를 지불하고 상호 서비스(직접 위성중계 포함)를 제공받는다.

제 4 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공동제작을 도모할 것이다. 합의에 의한 공동제작을 위해서 특별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다.

제 5 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시사프로나 기타의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프로그램에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에는 현존의 관행이 적용된다.

제 6 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호 희망에 따라 독일어로 된 제3국의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에 의해서 확정된다.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과 원저작자로부터의 방영권의 매입은 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관한 간행물을 제공한다.

제 8 조

1. 계약당사자 쌍방은 상호 정보여행, 박람회, 전시회, 그밖의 행사에 대표자들을 파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개개의 경우 별도로 합의한다.
2. 제작기술상의 경험교환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제 9 조

계약당사자 쌍방은 TV경연대회나 TV축제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다. 계약 당사자 쌍방은 작품출품 및 공식대표단 파견 등 행사참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검토한다.

제 10 조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표들은 더이상의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해서 시간적으로 서로 합의하여 수시로 만난다. 이러한 회합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지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 11 조

양측은 본 합의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법적인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 12 조

1. 본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적어도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문서로 해지하지 않는 한 3년간씩 연장된다.

3. 본 협약의 변경이나 보완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문서형식을 필요로 한다.

1987년 5월 6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원본 두통이 작성됨.

독일방송협회 (ARD) 소속 주방송공사들을 위하여

빌리발트 힐프 (Willibald Hilf)

동독국무원 TV위원회를 위하여

하인츠 아다멕 (Heinz Adameck)

1 통독직전의 서독의 통독에 대한 신문, 방송, 홍보시책은 어떤 것이었는지 ?

0 이 문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첫째, 독일통일은 동독이 서독연방에 가입하는 형태, 즉 서독이 동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
- 둘째, 서독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주정부가 방송에 대한 관할권과 신문, 잡지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신문은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사기업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방송은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형태였다는 점.
- 셋째, 동독은 국가가 신문과 방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었으며, 신문과 방송이 당과 국가에 의해 직접 설립, 운영되는 형태를 가졌었다는 점.

0 통독직전 서독정부의 신문에 대한 정책은 특이한 것이 없었음. 즉, 통일이후 동독의 신문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 맞게 재편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임. 단, 방송의 경우에서 기존 동독의 국영방송사를 해체 (통일조약 제36조)시키고 각주 또는 일부주들이 공동으로 공영방송공사를 설립

하는 기초작업을 했음.

- 0 TV방송의 경우 서독은 PAL방식이고 동독은 SECAM-OST방식이었으나, 동독주민의 90% 이상이 PAL방식과 SECAM-OST방식을 수신할 수 있는 TV 수상기를 보유 (동독은 동시 수신 가능한 겸용 TV 생산.수출)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시책은 필요없었음.
- 0 서독의 통일직전 대동독 홍보시책은 서독공보처가 연방특별예산을 지원받아 동독의 TV.라디오방송, 신문에 유료광고 추진, 각종 홍보자료 배포사업 등을 통해 각종제도와 법률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과 통일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진력했음.

2. 구동독지역의 공산당 기관지, 국영신문, 방송국 등을 어떻게 하였는지 ?

가. 구동독의 국영신문, 통신, 방송은 민영화되었는지 또는 국영으로 존속하며 발간하는지 ?

- 0 구동독에는 39개의 일간지가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당기관지 또는 대중조직의 신문이었음. 이들중 14개 신문은 신탁청(구동독의 당과 대중조직의 재산을 사유화시키기 위해 통일후 설립된 기구)의 관리하에 있으며, 신탁청은 이들 신문들을 매각중임. 나머지 25개 신문은 구동독의 당과 대중조직을 승계

한 새로운 당과 대중조직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이들 39개의 일간지들은 발행부수는 감소되었지만 발간은 계속 진행중임.

- 0 구동독의 통신사는 국영으로 운영되던 ADN통신 하나만 존재했었음. 동 통신사는 현재 신탁청 관리하에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로의 매각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임.
- 0 구동독에는 1개의 국영TV(DFF)와 한개의 국영 라디오방송사만이 존재했었음. 방송은 신문.통신과는 달리 방송사 해체 전권위원이 임명되어 방송사를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임. 과거 14,000명의 방송사 종사원중 반이상이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이라는 이유로 해직되었고, '91.12.31일 방송사 해체작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기술직원 중심으로 4,000여명만을 구제하여 적응훈련을 시킨 다음 새로이 설립되는 방송공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라 함.
- 0 서독의 방식에 따라 구동독의 5개의 주정부가 새로이 방송국(Landesstudio)을 설립하였으며, 방송국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송국과 공동으로 방송공사(Rundfunkanstalt)를 설립중임. 이미 "중부독일방송"이라는 방송공사가 설립되었으며 '91.12.31까지는 하나또는 2개의 방송공사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임.
- 0 구동독 TV방송은 현재 초저녁프로 (2시간)만을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기타 저녁시간대 채널은 서독 제1TV인 ARD-TV가 인수. 방영하고 있음.

3. 구동독의 국영신문. 통신. 방송의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서독출신인사로 교체하여 국영으로 계속 운영하는지 ?

- 0 구동독의 국영신문. 통신의 사장, 간부, 직원들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이 신문. 통신사가 금년말이나 내년초 신탁청에 의해서 매각되어 서독의 신문사가 인수할 경우 대규모 인사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0 구동독 방송(TV. 라디오)의 경우 방송사의 해체가 진행중이므로 방송사의 사장과 간부진이 해직되었으며, 그대신 방송사 해체를 위한 전권대리인, 기타 간부들을 서독출신 인사로 임명 해체작업에 임하고 있음.

4. 구동독의 국영신문. 방송. 통신사 직원에 대해서는 통독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0 구동독의 신문. 통신의 경우 일반직원들이 교체되거나 해직되지 않고 있음. 기언급했듯이 신문. 방송의 사기업화 (신탁청에 의해 매각)가 진행중이므로, 서독의 신문사가 구동독의 신문. 통신사를 매입할 경우 대규모 인원감축 및 교체가 예상된다.
- 0 해체작업이 진행중인 구동독 방송의 직원은 총 1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반수인 7,000명이 이미 해직되었으며, 해체작업이 완성되는 '91.12.31일

까지는 3,000여명이 더 해직되어 주로 기술직요원 4,000여명만이 남게될 것이라 함.

5. 구동독 언론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통독직후 자유민주체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시켜 활용하는지 ?

- 0 구동독 언론인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해체작업이 완성된 후 새로운 방송체제와 자유언론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 함.

6. 서독신문의 동독지사 설치 허용 여부

- 0 서독의 4대 전국지 ("Die Welt", "Sueddeutsche Zeitung",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rankfurter Rundschau") 및 주요일간지 ("Spiegel")가 70년대말 이래 동베를린에 소규모 지사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통일후에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만이 에르푸르트(Erfurt)에 지사를 설치했음.

7. 통독후 방송제도의 개선. 개편은 없었는지 ?

- 0 서독의 방송이 동독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제도 개선 등 동독에 송신탑을 신설하였는지, 동독의 기존송신시설을 연결. 활용하여 서독방송을 동독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

- 독일 연방통신부 산하 전기통신공사 (Telecom)와 독일 제2TV인 ZDF-TV는 통독 직후 구동독지역에 15개의 중계소(Grundnetzsender) 설치를 계획하였는 바, 이중 6개는 완성되었고 9개는 공사중이라 함.
- 독일 제1TV인 ARD는 구동독의 국영방송인 DFF의 제1채널을 인수받아 동 채널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음.
- 특히 독일 전기통신공사(Telecom)는 91년초부터 구동독지역에 케이블을 가설하고 있는 바 92년부터 동독 일부지역에서는 케이블이나 위성안테나를 통해서 상업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임.

8. 상호이질적인 방송제도를 어떻게 조화하는 방송시책과 제도를 펴나가고 있는지 ?

- 구동독의 방송은 '91. 12. 31일까지 해체될 예정이므로 방송제도를 조화시키는 시책은 없음.
- 구동독지역에는 2-3개의 공영방송공사(TV, 라디오)와 수개의 상업방송사가 92년 이후에 설립. 운영될 예정임. '91. 9월 현재 "MDR(중부독일방송공사)"의 설립 조약에 구동독지역의 3개 주정부가 서명한 상태이며, 이 방송국은 '92. 1. 1일 방송을 목표로 작업중임.

9. 서독 방송국의 동독지역 방송분국 설치 여부

- 0 '91.9월 현재 독일 제2TV인 ZDF-TV (독일 제2TV방송)가 구동독의 7개도시에 취재기자를 상주시키는 지사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1TV인 ARD는 지사가 없음. ZDF-TV 지사는 우리의 방송분국과는 성격이 다름.

10. 통독후 홍보시책 활동은 ?

가. 대동독국민 홍보활동

- 0 독일정부는 체제변화에 따른 구동독 국민들의 동요와 부담감, 두려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홍보대책을 세워 대규모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음.
- 0 다만, '91.9월말부터 대형버스를 개조하여 통독이후 변화된 각종 법령과 제도등 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와 안내원을 싣고 동독 각지역에서 이동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특별히 고안된 문답식 홍보자료 등 각종 홍보물을 대량제작, 구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집중 배포하고 있음.

나. 신문.방송.통신을 통한 기동 홍보 활동기법

- 0 독일에서 신문과 통신은 완전히 사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기법과 시책으로 기동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함.

- 0 방송의 경우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거의 모든 방송사가 주정부 관할하에 있으므로 연방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방송하고 있음. 다만, 독일 제2TV인 ZDF-TV의 경우 66인으로 구성되는 TV방송 협의회에 연방정부대표 3인이 포함되고, 9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1인이 연방정부에 의해서 임명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편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